

혁명

2호 (통권 10호)

- 세계대공황과 노동자의 답
- 2012년 불법파견 투쟁 승리를 위해 선행투쟁이 요구된다!
- [쌍용차투쟁] 우리의 힘을 바탕으로 해결할 것인가,
저들에게 '해결' 되어질 것인가?
- [정세 대담] 유명자,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을 말한다.
- [공개제언] "가칭) 노동자 독자 정당 건설 공동행동"을 제안합니다!



정세월간지
| 2호(통권 10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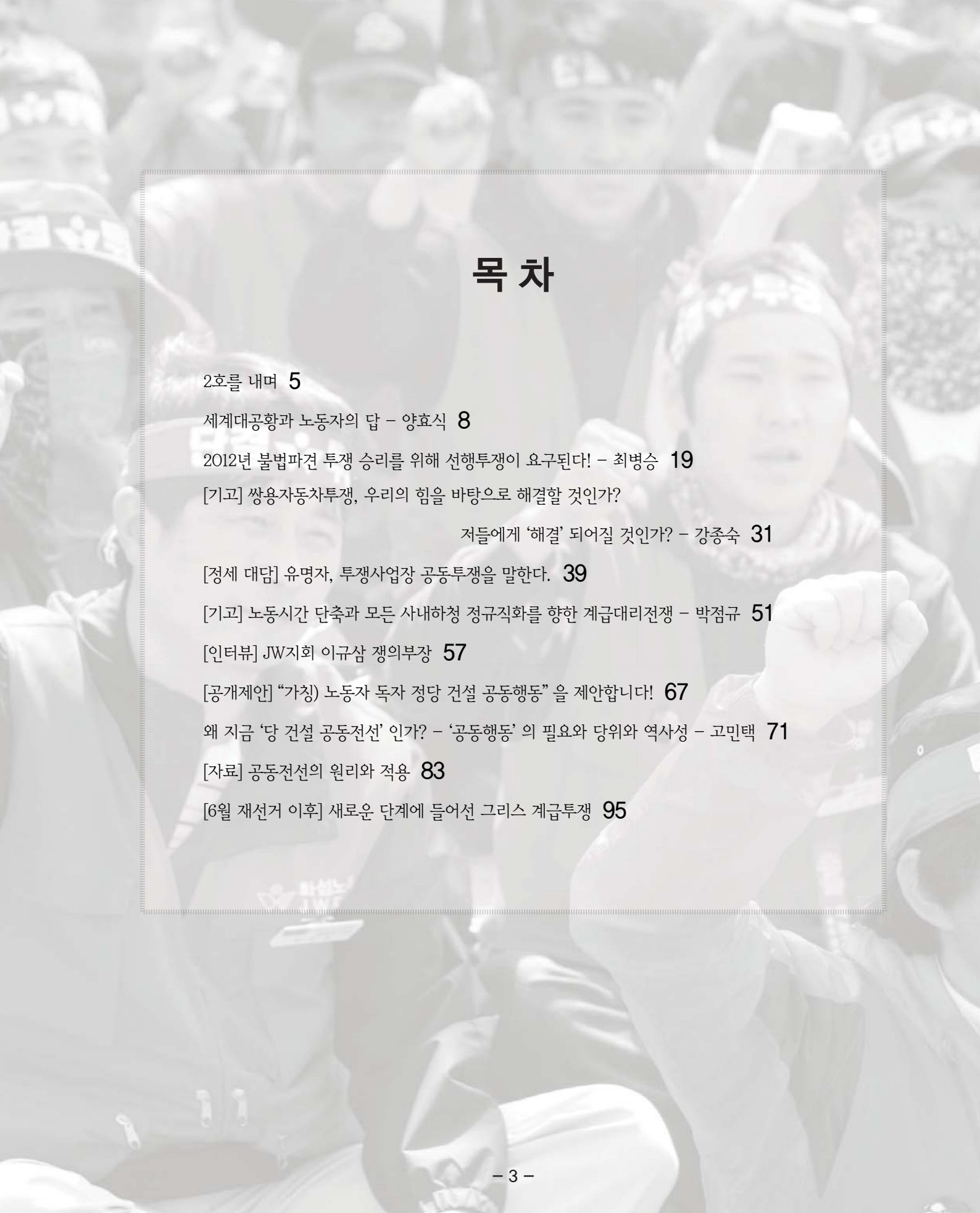
-
- 발행일 : 2012년 7월 12일
 - 발행처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3가 70번지 3층
 - 전화번호 : 02) 6348 - 8318
 - 블로그 : [blog.jinbo.net /wrp](http://blog.jinbo.net/wrp)
 - E-mail : wrp@jinbo.net
 - 값 : 5,000원
-

노혁주



지난 해 말에 노조를 만들고 6월 14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 JW중외제약, 생명과학 지회 동지들의 모습이다. 사측의 성의없는 교섭에 대응하여 JW지회가 2월 23일 4시간 파업을 진행하자, 사측은 다음날 공격적 직장폐쇄를 감행했다. 이후 JW지회의 상경투쟁을 비롯한 힘있는 투쟁으로 사측은 직장폐쇄를 풀었으나 조합원들은 현장복귀 후 자행된 노조탄압에 맞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을 활동을 보장받기 위하여 전면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현재 JW지회 동지들은 서울로 상경하여 매봉역 부회장 자택앞과 남부터미널역 JW신사옥 본사 앞에서 거리노숙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JW지회 투쟁 및 연대, 지원문의
박경훈 지회장 (010-8650-6591)



목 차

2호를 내며 5

세계대공황과 노동자의 답 - 양효식 8

2012년 불법파견 투쟁 승리를 위해 선행투쟁이 요구된다! - 최병승 19

[기고] 쌍용자동차투쟁, 우리의 힘을 바탕으로 해결할 것인가?

저들에게 ‘해결’ 되어질 것인가? - 강종숙 31

[정세 대담] 유명자,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을 말한다. 39

[기고] 노동시간 단축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향한 계급대리전쟁 - 박점규 51

[인터뷰] JW지회 이규삼 쟁의부장 57

[공개제안] “가칭) 노동자 독자 정당 건설 공동행동” 을 제안합니다! 67

왜 지금 ‘당 건설 공동전선’ 인가? - ‘공동행동’ 의 필요와 당위와 역사성 - 고민택 71

[자료] 공동전선의 원리와 적용 83

[6월 재선거 이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그리스 계급투쟁 95

〈혁명〉 2호를 내며



오죽하면 개별 활동가들이 당 건설을 위해 나섰을까. “당 건설”을 말하는 정치조직들이 한 두 개가 아니라 적어도 두 자리 수가 되는 데도 오죽하면 개인들이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지금 무너진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고, 노동자운동에서 계급협조의 고리를 끊어내서 빼앗긴 계급적 독립을 되찾아야 하는 과제가 절박하게 걸려 있는 정세이기 때문에 개별 활동가들 차원에서라도 더 이상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어 나섰을 것이다. 당 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조직들이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조차 당 건설에 대한 계획과 전술로 책임 있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딱하고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조직들이 그 동안 축적해 놓은 당 건설의 자원이 결코 적지 않을 텐데 정작 이 시점에 뭐 하나 명확하게 내걸고 나서지 못하다보니 당 건설을 모색하는 개별 활동가들의 논의가 완전히 원점에서부터 하나하나 다시 확인해야 하고 맨땅에서 새로 시작해야 하는 형국이다.

이제라도, 노동자계급의 당 건설을 자임하는 정치조직이라면 책임 있게 그리고 공공연하게 자신의 계획과 전술을 계급 앞에 제출하고 검증하는 실천을 조직해야 한다. 개별 활동가들 뒤에 숨어 뒷꿈무니를 추수

하며 아무 정치적 책임도 따르지 않는 배후정치로 도망가 버린다면, 그 동안 힘겹게 열어젖혀 온 사회주의 운동의 전면화와 사회주의당 건설 운동을 다시 10년 뒤로 후퇴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 시기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매개로 노동자계급이 자본가 정당의 꼬리로 전락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회복하고 다시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를 바로 세워야 할 엄청난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추수주의와 무책임한 배후정치로 숨어버리는 것은 지금 같은 바닥으로 처박힌 노동자운동의 정치지형을 재생산하는 데 일조하는 것만 될 것이다.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이 ‘가칭) 노동자 독자 정당 건설 공동행동’을 공개 제안하고 나선 데는 최소한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과 의지도 깔려 있다. 이미 온라인을 통해 발표한 제안문을 이번 2호에 실는다. <혁명> 독자들과 많은 토론을 해야 할 쟁점이라고 본다. 이후 노혁추가 개최하는 토론회뿐만 아니라 7월 14일 대전에서 예정된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활동가모임’ 2차 토론회를 비롯하여 여러 당 건설 관련 공개토론회들이 열릴 것이다. 이런 자리들에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길 바라며, 나아가 독자들께서 활발한 토론 글을 보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고 노동자 독자 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어떤 별개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노동자투쟁들을 어떻게 계급적으로 전진시킬 것인가의 과제와 응답 긴밀한 연동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쌍용차 투쟁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철폐 투쟁을 전면화해야 할 과제가 있다. ‘범국민적 운동’도 좋지만 자본가 정치권과 국회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정리하고 철폐!”로 올곧게 가지 못하고 “정리하고 요건 강화”로 구부러질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서는 결국 노동자들 사이에 ‘정리하고 철폐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체념과 패배의식만 만연시킬 것이다.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는 과제는 노동자 독자 정당 건설 투쟁에 서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더 이상 죽음의 행렬을 막고 정리해고를 철폐하는 투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과제다. 서로 다른 별개의 투쟁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야 하는 투쟁이기 때문이다.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쟁취하고 실질적인 총파업 돌입의 기운을 불러일으키고자 투쟁사업장들이 앞장서서 공동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을 중심으로 한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 사내하청 폐지 투쟁도 이제 본격적인 국면으로 돌입했다. 두 투쟁 모두 화물

·건설 노동자들이 물꼬를 튼 7-8월 총파업과 하반기 정세를 가르는 주요한 투쟁이다. 장투사업장 문제나 비정규직 사내하청 문제나 대선을 앞둔 자본가 정당들, 특히 민주당과 야권연대 세력이 기만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개입하고자 하는 투쟁이다. 이 투쟁들이 확대 강화되고 계급적 전진을 이루는 데서 ‘자본가 정당과 단절’의 문제는 초장부터 넘어야 할 과제로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번 〈혁명〉 2호는 쌍용차 투쟁과 투쟁사업장 공동투쟁, 그리고 현대차비정규직 투쟁에 관한 글과 함께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가 7~8월 투쟁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박점규 동지의 기고글을 각각 실었다. 노혁추는 이 투쟁들이 노혁추가 제안하는 노동자 독자 정당 건설투쟁과 어떤 구체적 고리를 통해 맞물려야 할지, 당 건설투쟁이 이러한 투쟁 과제들을 어떻게 자기 과제로 담아낼 것인지 그 길을 찾고자 했다. 각각 이 투쟁들에서 최일선에 있는 동지들이 기고와 대담을 통해 길을 열 실마리를 제공해주었다. 이 실마리를 가지고 〈혁명〉 독자들과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3호에서는 보다 진전된 논의를 담아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혁명**

뜨거운 7월, 동지들과 뜨거운 투쟁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투쟁!

2012년 7월 11일



세계대공황과 노동자의 답

양효식



지금 세계대공황이라고 하지만 한국만 보면 정말 대공황인지 긴가민가 한다. 한국은 공황에서 비껴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1998년 IMF 사태 때와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 은행들이 줄파산을 하고 기업들도 도산 사태를 맞아서 대대적인 직장폐쇄 물결과 정리해고로 노동자들이 대거 거리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냐는 것이다. 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한국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2009년(상반기에 -3.4%) 당

시와도 달리, 지금은 최소한 3-4%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대공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근거 아니냐고 한다.

정말 대공황 맞아?

그러나 1998년이나 2009년 같은 상황을 다시 맞아야, 또는 현재 그리스나 스페인 등 남유럽처럼 되어야 그 때서야 ‘아, 대공황 맞구나’ 라고 할 것인가? 공황 맞는 것을 좋아해서거나, 공황에 대한 예견이 들어맞기를 바라서가 아니다. 정세전망을 올바르게 해서 노동자계급의 투쟁방침을 정확히 세우자는 뜻이다.

사실, 대공황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미 한국의 수많은 노동자 민중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가난과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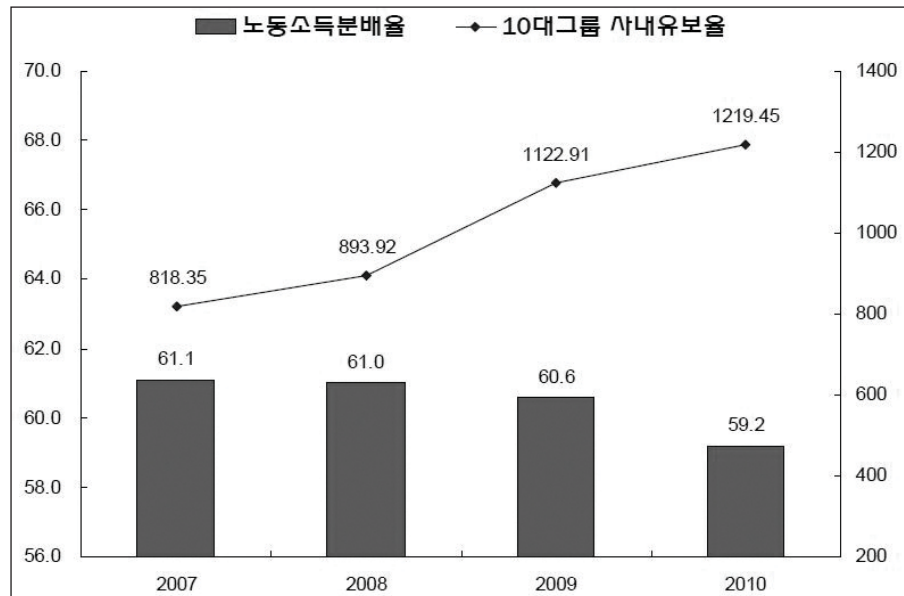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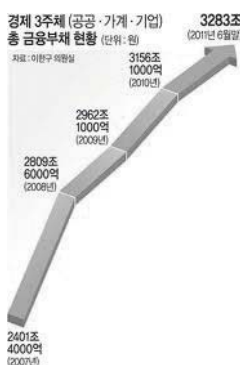


업과 빚더미와 생활고로 신음하고 있다. 이미 경제위기로 최근 2년 사이에 정리해고로 일터에서 내몰린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 비정규직 일자리조차 언제 잘릴지 몰라 해고와 실업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백만 불안정 노동자들, 대학 졸업 후 등록금 빚더미를 걸머진 채 경제위기 속에서 점점 더 구직 포기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실업자들, 가계부채 시한폭탄을 안고서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도시빈민 노령층들한테

는 공황 여부를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이미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거나 벼랑 아래로 떨어져 있다. 대공황의 한 가운데는 아니지만 한국도 언저리 어딘가에 들어와 있지, 결코 비껴서 있는 게 아니다. 언제 주변에서 중심으로 진입할 것인가가 문제일 따름이다.

상황은 이미 시작되었다. 현재 언론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럽 재정위기 격화와 맞물려서 미국의 경기둔화와 중국의 경착륙,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들의 성장 하락으로 수출경제 한국

도 타격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 정부기관을 비롯해 각종 재벌 경제연구소들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단지 이런 '외부환경' 때문만이 아니다. 국내적으로 시한폭탄처럼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계부채와 최근 그 증가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는 공공부채를 보면 지금 유럽과 미국이 부닥쳐 있는 부채 위기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도 유럽이나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 위기를 똑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나 재정위기의 그 근저에 있는 위기, 제도권 경제전문가들이 말하는 ‘펀더멘탈’의 위기, 즉 실물경제/생산부문의 위기가 그것이다. 자본의 과잉축적 및 그로 인한 이윤율 하락으로 인해 실물경제의 확대재생산이 구조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상황이 갈 데까지 간 것이다. 단적으로 재벌 대기업이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도 이를 (투자 대비 ‘적정’ 이윤율을 보장받을 전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생산에 재투자하지 않고 비실물경제에, 즉 금융투기에 쏟아 부음으로써 전체 경제에서 생산부문이 축소되고 따라서 ‘고용 없는 성장’ 같은 현상이 해소는커녕 누적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생산부문에서의 이윤율 하락 경향 때문이다.¹⁾

이것은 다름 아닌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이다. 한국 경제도 이런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근본 위기를 안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처럼 금융위기나 재정위기로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세계경제 위기, 즉 세계대공황의 자장 안에 있으며 계기가 주어지면 내연하고 있던 모순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조건 때문에 최근에 강만수(전 경제부총리)나 김석동(금융위원장) 같은 지배계급의 경제수장들이 “현재 위기는 대공황 때보다 더 크고 오래갈 것”이라며 “자본주의는 끝났다”거나,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결코 세계대공황에서 지금까지처럼 계속 주변에 남아 있을 수 없다는 실토인 것이다.²⁾

그렇다면 어떤 공황인가?

그렇다면 “공황”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공황’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닌가. 지금의 공황은 어떤 성격의 공황인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대공황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것인가?

격화되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2008년과 같은

1) 이명박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내세웠던 ‘낙수효과’론(먼저 대기업을 살려야 나중에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서민경제도 산다는 논리)이 집권당 내부로부터 “이미 실패로 판명된 이론”이라며 부정당하고 있는 데서도 볼 수 있듯이, 정권이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아무리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도” 이윤 전망이 보이지 않는데 자본이 무작정 생산을 늘리는 투자를 하겠는가.

2) 현 위기의 근본 원인을 이윤율 하락과 과잉축적 위기로 설명하는 글로서 <혁명> 창간준비1호(2011년 7월)에 실린 ‘현 국가부채 위기와 자본주의 체제 위기’를 보시오.

“제2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전망들이 최근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제도권 언론들이나 경제전문가들이 말하는 ‘제2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에 시작된 세계대공황의 제2라운드를 일컫는 그들 식의 표현법이다.

각국 정부가 은행 및 금융사들과 대기업들한테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쏟아 부으면서 2009년 중반 이래 금융위기가 진정되고 실물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자 그때부터 제도권 경제전문가들은 “위기는 끝났다”며 “회복”을 말하다가 다시 2010년 유럽 재정위기가 시작되면서 ‘더블딥 우려’(짧은 회복세에 뒤이은 재불황 또는 경기재침체)를 쏟아내기도 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저들은 이런 식의 낙관과 비관 사이를 수십 번이나 오가면서 일희일비 해왔다.³⁾

1929년에 시작하여 사실상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시점까지 계속된 세계대공황 때도 10년 기간 동안에 짧은 회복기가 간간히 끼어 있었다. 그때마다 당시 경제전문가들은 지금과 똑같이 낙관론을 펴다가 이내 비관적인 전망을 다시 쏟아내곤 했다. 경제전문가들이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것은, 7년 또는 10년 주기로 돌아오는 경기순환상의 공황(‘소공황’)에 대해서는 ‘경기침체’나 ‘불황’(영어로는 모두 recession으로 표현)이라는 용어를 써서 경험주의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 생산에 내재하는 구조적인 자본 과잉축적과 장기적인 이윤율 하락으로 인한 체제 수준의 위기(대공황)

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르주아 경제학의 지적 한계 때문이다.⁴⁾

순환적 소공황도 기본적으로는 자본의 과잉축적 모순 때문에 일어난다. 생산부문에 수익성을 못 찾아 투자하지 못하고 놓고 있는 과잉 유희자본(또는 그 때문에 금융투기로 돌려진 자본)의 존재를 막스는 “자본의 과잉축적”이라고 불렀다. 이것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가 말하자면 공황이다. 이 잉여 자본을 파괴함으로써 다시 경제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다.

경기순환 상의 활황 때 자본가들은 너도나도 설비투자를 늘리고 생산을 확대한다. 생산원료와 설비투자 비용에 해당하는 불변자본 몫이 높아진다. 이러한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잉여가치를 낳는 가변자본[노동력 구매비용, 즉 임금] 대비 불변자본 비율의 상승)로 이윤율이 떨어지면서 자본가들은 생산 확대를 위한 재투자를 꺼리게 된다. 전반적으로 생산 감축이 잇달아 벌어지고 나아가 기업 도산 및 은행들의 부실 사태가 벌어진다. 이러한 은행 및 기업 파산(그리고 이에 따른 직장 폐쇄 물결과 대대적인 정리해고, 대중의 공립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파괴)이 곧 과잉축적 해소/ 과잉자본 파괴 과정으로서의 공황이다.

그런데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들어와 자본가 정부는 대규모 은행과 독점대기업들이 파산하도록 놓아두었다

3) 이 시기에 자본가들이 더블딥을 우려하다가, 곧 경기부양책을 거두어들일 ‘출구전략’ 시점을 놓고 자기들끼리 행복한 논란을 벌인 과정에 대해서는 〈혁명〉 창간준비 2호(2011년 8월)에 실린 ‘더블딥 우려? 이미 자본주의 체제위기!’를 보시오.

4) 2008년 이래의 공황을 통칭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부르던 제도권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최근에는 이 공황을 뭔가 ‘통상적인’ 주기적 공황과는 다르다고 느꼈는지 ‘Great Recession’, 즉 대불황이라고 부르는 움직임도 생겨났다.



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워낙 크다보니 구제금융을 투입하거나(부르주아적) 국유화를 실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털어버려야 할 과잉자본을 털지 못한 채 그대로 안고 가는 상황이 일어났다. 7년 또는 10년 주기로 되풀이되는 매 경기순환에서 이러한 과잉자본을 깨끗이 털지 못하고 안고 가는 것이 3-4차례 계속되면(약 30년 계속되면) 과잉축적 모순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누적되어 내연해 온 모순이 한번 터져버리면 단지 3-4차례의 소공황을 합친 수준을 넘어 수십, 수백 배의 폭발력을 가지고서 터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대공황이다.⁵⁾

기업과 은행들의 줄도산을 막으려고 국가 개입을 통해 엄청난 구제금융을 쏟아 붓지만, 이것이 안 그래도 심각한 재정 적자와 국가부채 위기를 더욱 격화시킨다. 민간 자본 파산만이 아니라 국가 자본(공기업만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재정)의 파산, 즉 국가부도 사태를 가져온다. 물론 이 단계까지 가기 전에 제국주의 강대국

들은 자국의 위기를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시키고, 약소국들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재분할을 둘러싼 투쟁을 전면화하고 전쟁으로까지 치달는다. 이러한 전쟁 경제는 결과적으로 과잉축적의 가장 확실한 방출구가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바로 이렇게 해서 일어났다.

자본은 1980년대 이후 과잉자본을 체계적인 금융투기로 전화시키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금융화 국면을 개척했다. 생산부문에서 수익성을 보장 받을 수 없어 쌓아놓고 있던 사내유보금을 방출할 수 있는 새로운, 보다 수익성 있는 투자출구를 금융부문에서 고안해냈다. 파생금융상품 같은 각종 금융도구들의 ‘발명’이 그것이다. 이러한 각종 파생상품이 애초 자본에 비해 수백 배로 뻗튀기 되는 가공자본(현재 600조 달러 정도가 떠돌아다닌다)을 창출해낸 것이다. 어떠한 물리적 뒷받침도 없는 거대한 투기거품에 불과한 이 가공자본이 은행들과 각종 투자회사와 펀드사 등을 통해 원자재(석유, 식량, 각종 광석 등)와 각국 정부의 국채, 외환에 투기

5) 순환적 소공황과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적 위기를 표현하는 대공황 간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는 〈혁명〉 3호에 실린 ‘현 위기와 쇠퇴하는 자본주의’를 보시오.



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되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⁶⁾는 다름 아닌 은행이 가지고

있던 부실 채권을 다른 여러 채권과 뒤섞어 복합파생상품이라는 투기거품을 만들어 유통했다가 결국은 터져버린 것이다. 이 모기지 채권을 포함하고 있는 파생상품에 미국 은행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수많은 대형은행들이 투기하고 있다 보니 금융위기가 글로벌 규모의 위기로 터진 것이다. 과정은 복잡하지만 밑에 깔린 근본 원인은 자본의 과잉축적과 그로 인한 낮은 이윤율이다. 이윤율 저하가 글로벌 투기거품을 낳았다.

이와 같이 현 위기는 7년 내지 10년 주기 경기순환상의 통상적인 “불황”이나 “경기침체”가 아니다.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위기이다. 1980년대 이후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자본의 과잉축적 모순이 구조화된 위기, 특히 1990년대 이후 세계화를 통해 자본축적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던 부르주아지의 시도가 오히려 과잉축적 모순을 누적적으로 가중시켜오다가 마침내 2008년에 터져 나온 역사적 수준의 체제 위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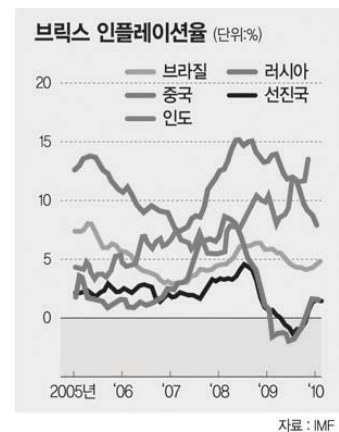
이 자본주의의 역사적 위기는 최초 미국의 경기하강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촉발된 2007년부터 따져서 5년째에 들어선 지금 그 2라운드가 한창 진행 중

이다. 이 역사적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위기의 초입부를 통과하여 이제 그 한가운데로 들어섰다. 그러나 위기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자본주의가 저절로 붕괴, 소멸하는 일은 없다. 자본주의의 ‘최종’ 위기 같은 것은 없다. 오직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혁명을 통해서만 이 사멸해가는 자본주의의 숨통을 끊을 수 있고, 되풀이되는 위기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 체제가 노동자 민중들의 널부러진 잔해를 밟고 서서 다시금 일시 생명을 연장할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2차 경제위기

다시 ‘제2 글로벌 금융위기’, 즉 세계대공황 제2라운드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 현황을 살펴보자. 2008년에 시작한 세계대공황이 잠시 미약한 회복 기미를 보이더니 작년

2011년 하반기 들어 다시 명백히 새로운 추락 국면으로 돌입했었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이어 ‘더블딥’ 공포, 그리고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의 재정위기/국가부도 위기,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심장



6) 2003년경부터 부시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주택 건설을 하여 은행 대출을 통해 서민들에게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집을 사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산 집값이 나중에 대출액보다 하락하여 은행들의 담보 채권이 무가치하게 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당시 은행이 750만 명의 서민들에게 주택담보 대출을 해서 확보한 모기지 채권 액이 6000억 달러였다. 즉 6000억 달러 규모의 과잉자본이 은행 대출이라는 형식을 매개로 해서 서브프라임(비우량) 모기지 채권에 대한 투기로 돌려진 것이다.

부로 위기의 ‘전염’, 중국, 브라질 등 모든 신흥국들에
서의 급격한 인플레이 등, 세계경제의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현상들이 터져 나왔었다. 이 가운데 특히 유럽 재
정위기는 2008년 같은 또 한 차례의 ‘신용경색’ 발발을
예고하고 있어서 국제 금융자본가들한테 최대의 공포
였다. 그리스가 채무 변제를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명
백해지고 있음에 따라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 예상되어서다.

그리스 부도 사태는 직접 연루된 은행들한테만 문제
가 아니다. 2008년 때처럼 파생금융상품의 형태로 이
그리스 국채의 일부가 포함된 채권을 매입한 은행들이
많다. 은행들의 영업비밀 때문에 그 매입한 채권 가운
데 어느 것이 아직 지급능력이 있는 것이고, 어느 것이
부도 또는 부도 위험에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
때문에 대출이 보류되고, 금리를 포함한 대출 비용이 급
등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스페인이나 포르투
갈, 이탈리아 같은 부도 위기 최 일선에 서 있는 나라들
의 채무 변제 능력이 더욱 더 위협받고, 이들 나라에 돈
을 빌려준 은행들의 지급능력도 큰 타격을 받게 될 상
황이었다. 이런 식으로 ‘전염병’이 유로존 전체로 확산
되는 양상을 취하고 있는데, 2008년 국가가 은행을 살
렸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은행만이 아닌 국가들의 지
급능력까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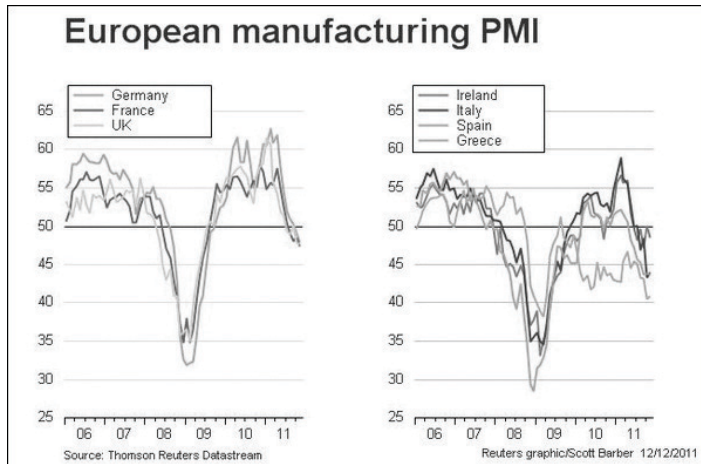
이러한 작년 말 유로존 “신용경색”으로 은행권 줄파

산이 예상되는 등 이른바 ‘제2차 글로벌 금융위기’로 떠
들석했던 상황이 올해 2012년 2월에 와서 진정되는 것
처럼 보였다. 유럽중앙은행이 1조 유로를 은행권에 초
저금리로 쏟아 붓고, 그리스에 2차 구제금융을 실시하
기로 결정하면서 유로존 전체로 위기 확산이 멈춰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유럽연합 25개국이 3월 2일 재
정협약(재정동맹)에 서명함으로써 유럽연합이 가맹국
의 예산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로 인해 유럽과 미국의 증시가 솟구쳤고, 많은 주가
지수들이 작년 6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속으로 끓아터지고 있는 유로존
경제에 가짜 봄날에 불과한 것으로 곧 판명되었다. 3월
말이 되자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경제지표들이 줄지어
발표되었고, 4월에 가서는 더 악화되었다. 제조업 경
기지수와 일자리 수치가 2011년 하반기부터 급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5월 기준 유로존 내 실업률이 11.1%
로 총 실업자 수가 1,780만 명으로 나타났다. 실업과 긴
축으로 인해 소비자 구매력이 하락함으로써 생산에 다
시 타격을 주고 있다. 5월 초에 발표된 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⁸⁾가 46.7%로 제조업 부문과 서비스 부문 모
두에서 경기지수보다도 훨씬 더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
다. 다시 7월 초에 발표된 구매관리자지수는 46.4%로
더 떨어졌는데 이것은 5개월 연속 경기수축이 가속화되
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유로존이 재정위기와는 별
도로 사실상 실물공황에 들어가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7) 2011년 하반기에 세계대공황 제2라운드 전망에 대해 분석한 글로는 <혁명> 창간준비 3호(2011년 10월에 실린 ‘파국으로 치닫는 세계자본주의’와 창간준비 4호(11월에 실린 ‘유로
존 위기와 세계대공황 제2라운드’를 보시오.

8) 기업의 신규주문 · 생산 · 출하정도 · 재고 · 고용 상태를 조사,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500이상이면 제조업의 확장을, 500이하의 수축을 의미한다. 제조업
을 비롯한 산업 경기동향을 잘 보여주는 지표로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유럽 주요국가 제조업 PMI 지수

또한 공황이 유로존에서 이제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세계의 제조업 발전소 역할을 하고 있는 신흥국들로 번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마침내 제조업에서의 글로벌 성장률의 둔화가 뚜렷하게 가시화된 것이다.

이와 같이 독일의 주요 수출대상국들인 브라질, 인도, 중국이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고, 이에 더해 미국 경제도 다시 실업률 증가 등 경기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들 나라들로부터의 수요 하락으로 인해 유로존에서 독일마저도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3월말에 다시 경기지표가 급락하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실물공황에 휩싸여 있다. 뒤이어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 나라들만이 아니라 벨기에, 네덜란드도 경기지표 상 실물공황으로 드러났고, 4월 말에는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졌다. 프랑스 경제도 거의 확실하게 마이너스 성장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8년에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신호탄으로 터진 최

악의 은행권 위기로부터 세계경제가 (2009년 중반에) ‘구제’된 지 3년이 지났다. 글로벌화한 세계경제가 동시에 파국적 붕괴 상태에 이르자 당시 각국 정부들이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퍼부었다.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완전한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 자본가 정부들이 전례 없는 규모로 ‘손실의 사회화’에 착수했다. 파산한 은행과 기업들에 대한 구제금융과 국유화, ‘독성’ 민간부채의 매입, 사악한 긴축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서 그렇게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들에게 전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분담’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성장’의 귀환은 실현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2008년에 첫 붕괴를 야기한 기저의 문제들(과잉축적과 이윤율 하락)이 이제 다시 두 번째의 훨씬 더 깊은 위기를 몰고 오고 있다.

케인스주의 성장정책이 해결책인가?

이와 같이 제2차 공황이 유럽을 휘감고 나아가 전 세계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1930년대 대공황 때 성장을 촉진하는 해법으로

공황을 극복해냈다고 하는 케인스의 경제이론이 긴축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프랑



5월 23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프랑스수아 올랑드 프랑스 신임 대통령

스 대선에서 사회당 올랑드 후보가 독일 주도의 EU 긴축정책을 견제하며 ‘성장’을 내걸어 승리하자 이를 계기로 ‘지금은 긴축 대신 성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거센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가 다시 공황으로 치닫고 은행 부실 · 파산의 위험이 증대하자 성장 정책이 갑자기 긴축의 사막에서 오아시스 신기루로 나선 듯한 분위기다. 경제전문가들이 하루아침에 신자유주의 긴축의 전도사에서 돌연 케인스주의 성장론자들로 개종한 것처럼 보인다. (당장 한국에서도 과거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허구적인 대립구도에서 ‘분배’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최근에 와선 그 대선주자들의 입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동행”, “진보적 성장”, “사람이 성장동력”이라며 ‘성장’을 내걸기 시작했다.)

그 동안 긴축 프로그램으로 허리띠가 졸라매진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인프라,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성장 추구라는 케인스주의 메시지가 호소력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이해할 만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성장정책을 위해 정부들이 ‘금융시장’(금융자본가들)으로부터 돈을 더 많이 빌려서 경기부양을 하면 다시 부채가 증가한다. 그러면 국채에 투자한 금융자본가들이 경계를 일으켜 국채금리 폭등을 유발시키고,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린다. 그 결과, 국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러면 다시 “재정균형”과 “건전재정”을 빌미로 한 긴축 요구가 재개될 것이다.

일부 좌파들은 케인스주의를 개량주의라고 옹계 비판하면서도 현 시기 몰수 · 국유화 및 노동자통제 강령 같은 이행강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케인스주의를 실천적 대안으로 인정하게 되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자본가 정치세력과 손잡는 야권연대를 거부하고 노동자계급의 독자 정치를 염원하는 노동자들은 이러한 케인스주의에 대해서도 결코 노동자계급의 대안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이다. 금융자본 · 독점자본 몰수 국유화와 노동자 생산통제 도입을 거부하는 등 결코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도 건드리려고 하지 않는 케인스주의 정책의 필연적인 귀결점이다. 한국에서도 현재 새누리당부터 민주당 · 통진당 야권연대 블록에 이어 일부 좌파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치세력들이 내걸고 있는 “경제민주화”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케인스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시달렸던 조건에서 케인스주의라도 되면 좋은 것이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한국도 이미 공공부채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야권연대 연립정부가 금융자본과 경제관료들의 복지재정에 대한 브레이크와 “균형재정”(즉 긴축) 요구를 거슬러서 일자리

창출과 공공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케인스주의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까? 유럽 재정위기를 들먹이며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는 보수우익의 공세를 뚫고 설사 케인스주의 정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내외 금융자본에 의한 공공부채 금리 폭등 및 원화 공격을 통한 인플레이 유발에 굴복하고 결국 긴축 요구에 순응할 것이다. 은행 등 금융자본과 재벌을 몰수 · 국유화하고 노동자통제 하에 통합된 단일 국영은행을 통해 이윤이 아니라 민중들의 필요에 복무하는 경제 재편에 즉각 착수할 혁명적 노동자정부만이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정리해고 · 비정규직 철폐도 즉각 실시

할 수 있다.

현재 유럽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케인스주의에 대한 환상이 운동진영에까지 강하게 퍼져 있다. 일부 좌파들은 케인스주의를 개량주의라고 옹계 비판하면서도 현 시기 몰수·국유화 및 노동자통제 강령 같은 이행강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케인스주의를 실천적 대안으로 인정하게 되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자본가 정치세력과 손잡는 야권연대를 거부하고 노동자계급의 독자 정치를 염원하는 노동자들은 이러한 케인스주의에 대해서도 결코 노동자계급의 대안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

위기관리 이론이자 공황타개책으로 떠받들여지고 있는 케인스주의는 과소소비설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 과소소비설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 부족 때문에 경제위기가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이 속설에 의하면, 수요 부족이 경기하강을 촉발하고 불황을 도래시킨다. 불황이 진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고용 불안에 휩싸여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시작한다. 이로 인해 수요가 더 준다. 이것이 경제를 더 깊은 불황으로 빠뜨리는 악순환을 촉발한다. 공황이 시작되고 이에 따라 은행은 대출을 중단하고 화폐 축소 쪽으로 방향을 튼다. 이것이 공황을 더 심화시키고 은행 파산에 불을 당긴다.

이와 같이 공황을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유효수요 부족의 결과라고 보는 케인스주의자들은 공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악순환을 깨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1930년대 미국의 뉴딜정책이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내세운 공공노동. 실제 당시 대공황은 곧 이어 발발한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의 살상과 파괴의 잣대 위에서 극복되었다. 이는 곧 수천만의 인명을 살상하고 대규모의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전쟁을 통해서만 체제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아편성을 증명할 뿐이었다.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 공공사업, 복지 도입, 그리고 여타 직접적인 경기부양 조치 등을 통해 수요를 진작시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내야 한다는 것이다.

케인스에게 공황의 원인은 생산이 아니라 소비 영역에 있다. 그 때문에 수요를 회복하기만 하면 충분히 공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1930년대의 미국 뉴딜 정책도 이렇게 수요를 대폭 진작시켜서 공황을 극복했으며 케인스 정책의 대성공 사례로 추켜세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이거나 거짓선전이다. 케인스주의 정책의 성공은 실제보다 뻥튀기 되었고 그 효과는 훨씬 더 제한적이다. 뉴딜정책이 건설 원자재 수요를 극적으로 늘려서 경제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1937년에 직접적인 경제 부양 조치가 중단되자 다시 불황으로 되돌아갔다. 이후 GDP 성장세가 회복된 것은 1939년부터 전쟁경제로 돌입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경기 자극 효과 때문이었다. 한 마디로 케인스주의는 공황을

종식시키는 데 실패했다. 국가 개입을 통해 공황을 일시적으로 억눌렀을 뿐이다.

현재의 공황 전개를 분석해 봐도 케인스주의 도식은 잘 들어맞지 않는다. 케인스주의는 공황의 진행이 몇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하는데, 먼저 수요 하락에서 시작하여 경제하강이 화폐축장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거쳐 완전한 공황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공황이 터지기 직전까지 수요는 높은 수준에 있었고 은행의 신용대출이 소비를 강력히 추동하던 상황이었다. 불황을 불러온 것은 은행 위기였다. 수요 하락은 그 뒤에 왔다. 케인스주의는 전후 호황에 대해서도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전후 호황은 긴축과 낮은 소비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대대적으로 확대되면서 도래했다.

끝으로, 케인스주의자들은 채권시장의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긴축을 빨리 시행하지 않는 나라들의 경제에 대해 금융자본이 퍼부를 맹렬한 폭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올랑드 같은 사민주의자들을 선거로 뽑아서? 루즈벨트의 뉴딜 같은 제한된 프로그램조차도 1930년대 미국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파업투쟁과 노동조합 결성 물결에 의해 비로소 강행할 수 있었다. 당시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 자본으로서는 달리 반발할 여지가 없었다.

긴축 반대/ 복지 도입 같은 제한된 개량조차도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을 전면화하고자 하면 현재 그리스에서 보듯 자본가계급은 투자 파업과 자본 해외도피

로 대응하여 공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따라서 수탈자인 자본가계급을 수탈하는 사회주의적 조치를 통해 공황을 해결하려는 혁명적 전망을 품지 않고서는 제한된 개량조차도 관철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정세이다.

* * *

오늘 공황 앞에서 마치 우리의 선택 조건이 오직 신자유주의적 긴축과 케인스주의적 지연 전술 사이에 놓여 있는 것처럼 제기되고 있지만, 어느 쪽도 이 역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을 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윤 동기라는 원자화된 이기심에 기반한 시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 동안의 허다하게 실패한 실험을 또 다시 되풀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 내에서 단지 어느 버전의 자본주의를 택할 것이냐 라는 그 허구적인 선택 구도를 깨고,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체해야 한다. 공황의 참화는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다. 사회주의는 이 반복되는 자본주의 공황을 역사책 속으로 영원히 추방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이다. **혁명**



최병승(현대자동차 노동자)



현대차(주)는 [함께가는 길]이라는 짜라시를 통해 “금속노조 짜맞추기 식 정치파업 중단”, “휴가 전 타결과 무쟁의 주식지급”을 주장하며, 13일 금속노조 총파업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 19 -



현대차 노조 교섭위원들이 6월 28일 9차 단체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일어나고 있다. 사측이 말하는 "정치파업 중단"에 대해 공세적으로 맞받아치지 못하고, '정치파업이 아니라 현대·기아 공동투쟁'이라는 식으로 비껴가서는 안된다.

조합의 현실도 들여다 볼 수 있다.

먼저 뼈아픈 것은 사측이 말하고 있는 “금속노조 짜맞추기 식”이 될 가능성이 실제로 높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단결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쟁일정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의도이지만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보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볼 때 겉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짜맞추기 식”, 즉 ‘투쟁을 통해 투쟁을 조직하고 강화하는’ 역동적 과정으로서의 투쟁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정에 투쟁을 구겨 넣는 방식이 되풀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

야 한다. ‘투쟁일정’을 기계적으로 우선하면 정작 ‘투쟁’은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다. 그야말로 본말이 뒤바뀌는 것이다. 예컨대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 그럼에도 사측이 계속해서 침탈을 해 올 때 즉각적인 대응과 투쟁을 하지 않았던 것을 들 수 있다. 투쟁 조직화는 하루하루,时时刻刻 벌어지는 사태에 올바른 대응과 투쟁을 곧바로 제 때 할 때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일정을 내세워 미루다보면 정작 그 때가서는 아무 동력도 남지 않는다. 투쟁 조직화, 투쟁 준비는 일상적 대응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사측이 말하는 “정치파업 중단”도 마찬가지다. 현대차지부나 금속노조는 이에 대해 공세적으로 맞받아치지 못하고, ‘정치파업이 아니라 현대·기아 공동투쟁’이라는 식으로 비껴가서는 안 된다. 우선 그러한 대응은 현실에서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론을 노동자 쪽으로 끌고 올 수도 없다. 오히려 투쟁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줄 뿐이다. 지금 민주노총이 말하고 있는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 요구는, 그것이 단지 형식적 구호가 아닌 한에서는, 그 자체가 이미 정치투쟁을 하겠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다. 따라서 공식노조는 조합원들에게 그렇다는 것을 정확히 전달하고 왜 그래야 하며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해야 마땅하다. 지도부 자신부터 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자본가정당과 단결, 야권연대 반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총선 때처럼 자본가정당과의 정책협약 수준이나 선거심판론과 같은 대응 정도로 투쟁을 제약해 가지고는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 요구는 공문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지금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두고 정치권에서조차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한 지형과 현대차지부, 지회 투쟁이 결코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아니 현대차지부,

지회 노동자들이야말로 직접적 당사자이다. ‘재벌 몰수 · 국유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투쟁해도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비칠 게 없는 그러한 정치지형이 이미 펼쳐지고 있다.

금속노조 산하 전 지부, 지회 임금요구안은 동일하다. 왜? 금속노조는 단일노조이기 때문이다. 사측이 산별중앙 교섭을 거부하기 때문에 금속노조가 대각선 교섭 방식으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고, 금속노조 방침에 따라 2012년 산하 지회, 지부가 통일적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현대차지부, 지회 투쟁은 금속노조 2012년 단체교섭 투쟁이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금속노조 투쟁을 비롯한 현대차 2012년 투쟁은 정치적이다.

이 글은, 위에서 말한 상황 판단에 기초하되, 구체적으로는 현대차지회 불법파견 투쟁에 대한 그 동안의 경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대차지부 주간연속 2교대 투쟁에 대해서 만이라도 함께 다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불법파견 문제를 회피하려는 사측

사측이 일방적으로 금속노조 투쟁을 정치파업으로 몰고 있는 것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2012년 투쟁을 경제적 요구로 제한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돈과 주식만 받고, 주간연속2교대와 불법파견 투쟁은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실제 사측은 현대차지부와 지회 단체교섭, 원하청이 함께하는 특별교섭에서도 문서로 사측 제시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무려 2개월간 진행한 교섭에서 사측은 제시안 제출도 없이 “노조요구 과도, 파업하면 주식 안준다(무쟁의 무상주)”와 “정치파업”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면서 노동조합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따라서 2012년 투쟁의 모든 책임은 사측에게 있다.

	지부 단체교섭	근무형태변경추진위 협의	불법파견 특별교섭	지회 단체교섭
요구안 발송	2012. 4. 23.	2012. 1. 3 (근추위 구성)	2012. 5. 8.	2012. 6. 8.
시작일	2012. 5. 10.	2012. 1. 5.	2012. 5. 15.	2012. 6. 12.
교섭차수	9차 교섭	본회의 4차, 실무회의 18차	6차 교섭	5차 교섭
제시안	없음	2012년 지부 요구안 수용불가 2010년 합의내에서 논의	문서제출 거부 6차 교섭에서 구두 제시 ¹⁾	교섭자체 거부 없음

1) 5~6차 교섭에서 사측 구두제시 내용

① 2년 이하 사내하청은 계약해지하고 직고용 계약직으로 채용하자.

②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공정을 분리하여 합법도급 하자.

③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 지원반 하청인원 200여명에 자리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

– 공정분리를 전제로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규직화 진행할 수 있으며, 방법은 자연감소 신규채용시 비정규직 인원의 일부를 채용하겠다.

이는 단체협상투쟁까지 벌여졌던 현장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 결과이다. 따라서 2012년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잘못 대응한 현장사안을 제대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뱅 지침

이후 현대차지부는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정규직 철폐! 불법파견 투쟁 승리! 긴급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수조사가 끝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긴급지침’을 위반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012. 3. 8. 현대차지부 긴급지침]

- 신규비정규직 투입금지와 계약해지 금지
- 비정규직 전환배치 및 공정분리 금지
 - ① 현재의 공정을 일방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리하는 행위
 - ②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정을 이동하는 행위
 - ③ 각 업체의 현재 업무를 인위적으로 업체별로 조정하는 행위
 - ④ 한시하청(산재, 근골격계) 대치자를 일방적으로 전환배치 하는 행위
 - ⑤ 지원반 운영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비정규직을 전환배치 하는 행위
 - ⑥ 공정분리 과정에서 정규직의 공정이동 및 전환배치 하는 행위
 - ⑦ 외주화 금지(사내 노사합의 및 일방적인 외주화 금지)

긴급지침을 발표한 상황에서도 한시하청 투쟁을 노사합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전환배치는 음성적으로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소규모 블록화가 이뤄지기도 했다. 아래 는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

“FS터보 투입관련 인원투입은 2교대 기준 13반(2명), 16반(4명), 17명(2명), 20반(6명), 펌프서브장(2명)으로 한다. 단, 13반 투입인원 2명은 한시운영하고 부동액 리저버 작업 이관 시 즉시 환원조치 한다.” (2012. 4. 13. 의장1부 FS 터보 투입관련 합의서 中).

“FS터보 투입관련 인원투입은 2교대 기준 13반(2명), 16반(4명), 17명(2명), 20반(6명), 펌프서브장(2명)으로 한다. 단, 13반 투입인원 2명은 한시운영하고 부동액 리저버 작업 이관 시 즉시 환원조치 한다.” (2012. 4. 13. 의장1부 FS 터보 투입관련 합의서 中).

원형 및 엔진룸 붕괴공정 운영 방안							
구분	원형	붕괴	인원현황	→ 변경	구분	원형 및 붕괴	인원현황
A조	4명	2명	직영 4명, 업체 2명		A조	5명	업체 5명
B조	4명	2명	직영 5명, 업체 1명		B조		업체 4명, 직영 1명

- ※ 고정간 이동은 5월 2일부 기준으로 시행한다.
- ※ 물량변동 및 공정변경 사유 발생시 종전('12.04.13) 기준으로 적용
- ※ 기타 심각한 문제 발생시 협의한다. (2012. 4. 18. 도장2부 별도 회의록 中)

“2.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 및 작업 능력 확보를 위해 12년 6월 29일까지 한시인원(1명/조당) 추가한다.”(2012. 4. 27. 실려반 원형 및 보철공정 운영 부속 협의 건 중)

위와 같이 현대차지부는 현장 문제제기가 없으면 넘어가고,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책임 있게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대의원과 조합원 책임으로 돌렸다. 그러나 집행부가 최소한 지침으로 기준을 결정했다면 문구 그대로 또는 의미 확장을 통해 반드시 사수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즉, 기준에 따라 집행했다면 일부 조합원 불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지침을 위반하는 합의는 막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80% 이상 사내하청 정규직 채용, 2년 미만 1,564명 집단해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신차투입과 다른 경우지만 현대차지부 5공장사업부 위원회는 51라인 4UPH UP을 하였음에도 UPH UP에 따른 인원충원 후 라인운영을 합의함으로써 긴급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

사측은 각 사업부별 협의를 통해 현대차지부 긴급지침을 무력화시킨 후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탄압을 강화했다. 지회는 노동법과 지부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지회 집행부가 조합 활동을 위한 조합출입과 현장출입을 막아섰다. 지회는 10일간 노숙투쟁을 전개했고, '최초로 현대차와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의미 외에 실효성이 없는,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킨 합의서를 작성했다. 현장조직, 노숙투쟁 유지 등 현실적 조건이 강제된 단체협약보다 후퇴

지회 집행부 활동을 합의로 통제한 사측은 곧바로 신규채용을 발표했다. 현대차지부는 ‘사내하청 할당’에 대해 반대했지만 적극적인 행보를 하지 않았다. 한편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조합원 채용원서 접수 금지를 지침으로 내렸으나 많은 조합원이 원서접수를 했고, 면접대상자가 됐다. 사측은 고용이 승계되어야 할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신규채용’으로 전환했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대차비정규직지회로 가입하는 것을 봉쇄했다.

6월 29일 발표한 신규채용 결과 [산재대체 우선채용 2명 별도]

노동조합에 대한 침탈이라고 규정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조합원에게 사건의 진실을 알렸어야 했다. 그리고 노사 관계를 악화시키고 경비대를 동원하여 조합활동 탄압을 지시하는 몸통인 윤갑한 공장장을 처벌할 것을 주장했어야 했다. 그러나 현대차지부는 상황에 대한 중대성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요구를 확정하고 특근거부와 중식 향의집회만을 결정했다. 결국 총무팀과 협력팀 부장 2명을 사측이 자체 징계하고 폭행 당사자는 전환배치 시키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활동은 현대차지부가 통제 관리하는 내용을 합의했다.

“사내 비정규직 지회의 평화적 사내(본관 정문 안쪽) 수요 집회를 보장한다. 단, 사내 시설물 점거, 충돌 등 회사가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평화적인 집회가 이루어지도록 지부가 입문, 집회, 출문 등 전체를 책임진다.” (2012. 5. 31. 별도회의록 중)

현대차지부 김홍규 수석부지회장 폭행 관련 합의서 작성 이후 사측은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특별교섭 요구안에 포함된 2년 미만 사내하청 1,564명을 집단해고 후 직고용 계약직(직영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언론과 [함께가는 길]을 통해 발표했다.

직고용 계약직 채용은 현대차지부 단체협약 제4조(기득권저하 및 노동조건 저하금지), 제 7조(통지의무), 제 20조(인사원칙), 제44조(인원충원) 등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8월 2일 개정되는 파견법을 회피하고, 전환배치를 통해 블록화를 실시해 불법파견을 은폐하여 노동 유연화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8/2 개정 파견법 회피

사측 자료(5공장 사업부)와 현장 확인 결과에 의하면
소규모 블록화공정과 하청인원이 집중된 CKD, 수출선적부에서 노동하는 2년 미만 사내하청은 직고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즉, 사측이 진성도급이라고 주장했던 사업부와 공정을 제외한 것으로 볼 때, 2년 미만 사내하청 직고용은 8월 2일 개정파견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

[illegible]

둘째, 직고용 계약직(기간제)로 노동유연화 확대 및 신규채용 봉쇄

사측은 6월 12일 교섭에서 두 가지를 방향을 제시했다. 하나는 기간제법에 의한 기간제 계약직 사용이고, 다른 하나는 파견법에 의한 합법파견업체에서 3개월~6개월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이다. 후자는 법에 노사협약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검토·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년 미만 사내하청 대상자는 모두 정규직 대치공정(M/H 미충원, 휴직, 전환배치, 노조파견, 산재 등)이다. 결국 기간제가 허용되면 사측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유에 대처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생산량 변화에 따른

따라서 지금은 1,500명을 투입하지만 이후 이 수치는 사내하청노동자가 증가한 것과 같은 속도로 무섭게 확대 될 것이며 신규채용은 봉쇄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지부와 사유제한에 대한 노사협의를 하게 되면 비정규직에 대한 일정한 투입비율을 인정하는 16.9%와 유사한 합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년 이하 미만 사내하청을 모두 정리하고 나면 다음은 2년 이상자에 대한 공격을 진행할 것이다. 2년 이상자는 대부분 상시업무, 고정인력이기 때문에 인원 감소요인(신규채용, 노사간 각종협의를 등)이 있어야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분에 그칠 수 있다. 그러나 직고용 계약직을 허용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업체폐업이라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체 폐업 또는 업체 통폐합을 하면 지금 2년 미만 사내하청이 겪고 있는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현대차가 선별해서 직고용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측은 2011년 장기근속자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인원을 선별 채용했다.

구분	울산 (기술직)	아산 (기술직)	전주 (기술직)	남양 (기술직)	정비 (정비직)	판매 (영업직)	일반직군
대상자	233	6	3	5	17	12	15
채용인원	220	6	3	5	2	2	1

넷째, 블록화로 진성도급 추진

다섯째, 파업 대체인원으로 활용

- 26 -

상황에서 신규채용을 조건으로 파업대체인원, 구사대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는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 도급 또는 하도급’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사측은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직고용 계약직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직고용 계약직이 별도의 훈련 없이 곧바로 생산라인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파업대체 인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축약직 계약직 채용 계획									
구 분	대 상 인 원	미확정 (7월말 이전 공정 소멸)	직영 계약직 투입				소 계	차 이 인 원	합 계
			1차 (7/2)	2차 (7/9)	3차 (7/16)	4차 (7/23)			
울산공장	1,280	217	239	209	265	306	1,019	44	1,280
전주공장	93	9		33	20	29	82	2	93
아산공장	112	19			24	61	85	8	112
합 계	1,485	245	239	242	309	396	1,186	54	1,485

불법파견 증거를 완전히 은폐하려는 사측 의도를 알면서도 현대차지부와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대응은 미비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2년 미만 직고용 추진 철회 없이 특별교섭에 참석중단 △2년 미만 사내하청 직고용 계약서 작성 금지 호소와 조합원 작성금지 △조기 조정신청을 통해 쟁의권 확보를 결정하고, 2년 미만자 조직화에 나섰으나 실제적인 흐름을 조직하지 못했다. 그나마 JM관련 복귀자, 동성기업 복귀자를 직고용 계약직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강제 전환배치를 막아낸 효과는 있었지만 직고용 계약직 자체를 저지하지 못하면서 이후 발생할 다양한 문제를 남겨놓았다.

그러나 현대차지부는 이와 관련해 ‘직고용 계약직 채용 반대’ 입장을 제출했지만 강제채용 시 대응지침을 마련하지 못해 원천적 저지 투쟁을 조직할 수 없었다.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채용을 계획하는 시기 ‘울산공장 대의원 비상간담회’를 개최하고, 2012년 3월 8일 긴급지침에 따라 ‘직고용 계약직 투입 저지’를 조직하는 적극성도 없었다. 입장만 있고 실천은 없었기에 어떠한 조직화도 할 수 없었다.

현장 대의원과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사측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하청업체간 전환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응 방침을 문의해도 원론적 입장을 얘기하고 대의원이 알아서 판단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7월 2일 4공장을 제외한 전 공장에 직고용 계약직이 239명이 투입됨에도 직고용 계약직 투입과 강제전환배치 현황을 1공장만 확인한 지회 정보력과 물리력 한계로 7월 1일 조합원 총회에서 직고용 계약직 투입은 저지하지

지부는 7월 2일 직고용 계약직 239명이 투입된 지 하루가 지나 △비정규직 전환배치 및 공정분리 금지 △기간제 직고용 정규직 조·반 편성 금지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은 직고용 계약직 투입 이전에 전환배치가 진행되었고, 지침 발표이후에도 작업교대, 특근 작업조 편성 등 각 반에서 관리했다. 결국 7월 5일 1공장 21반 사고자 대치인으로 지원반에서 직고용 계약직 3명이 투입되자 ‘직영 기간제 계약직 직고용 관련 지침’ 위반으로 지부 대의원이 라인을 잡았지만 정규직 지원반 인원 투입 후 라인을 가동한 현장투쟁이 벌어지자 이 지침마저 후퇴하기 시작했다.

불법파견 정규직 쟁취를 위해 선제투쟁을 조직하자!

현대차지부는 7월 2일 조정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했다. 조정기간도 분쟁상태에 있는 것으로 쟁의기간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7월 9일부터 투입하는 직공용 계약직은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투입하는 파업

대체인력으로 규정하고 전면 저지투쟁을 조직한다.

둘째, 규약개정 없이 모든 사내하청을 즉각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직고용 계약직뿐만 아니라 모든 사내하청 정규 직 전환 대책을 즉각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투쟁한다.

사측은 [함께가는 길]에서 “8월 2일부터는 한시하청 인원뿐만 아니라 일용공까지도 단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의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즉, 현대차가 불법파견 사업장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2년 미만자를 직고용 계약직으로 충원했다. 따라서 직고용 계약직도, 한시하청도, 일당직도 8월 2일부터는 정규직이며, 2년 이상자는 2년이 초과한 날로부터 정규직이며 현대차지부 조합원이 된다.

불법과견 투쟁 10년 동안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가 “노동자는 하나다”, “원하청 공동투쟁”이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에 걸 맞는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측 도발로 오히려 왜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요구를 내 건 투쟁이 필요하며 중요한가가 부각됐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 이것이 노동운동의 기본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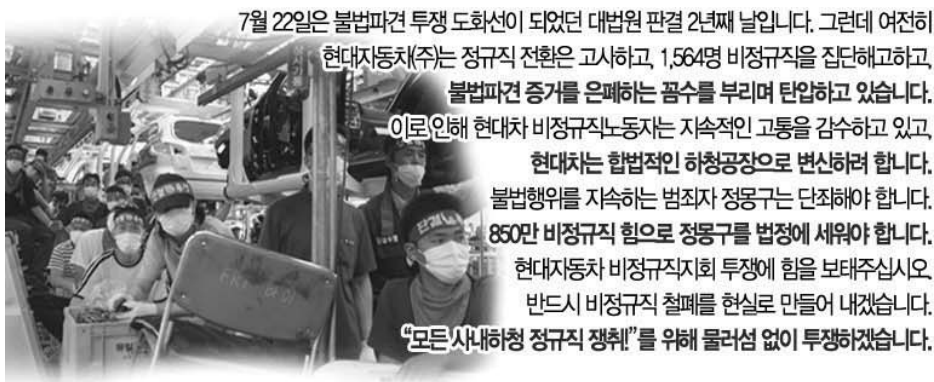
지금 불법파견 투쟁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기간 활동에 대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현대차 투쟁을 조직했던 모든 동지들이 나눠가져야 할 몫이다. 그러나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도 결단하지 못하고 물러선다면 앞으로는 반성하고 전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모든 노동자가 단결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따라서 2012년 불법파견 투쟁 구호는 이렇게 정해야 한다. **혁명**

“6만 조합원 단결투쟁,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쟁취하자”





혁명의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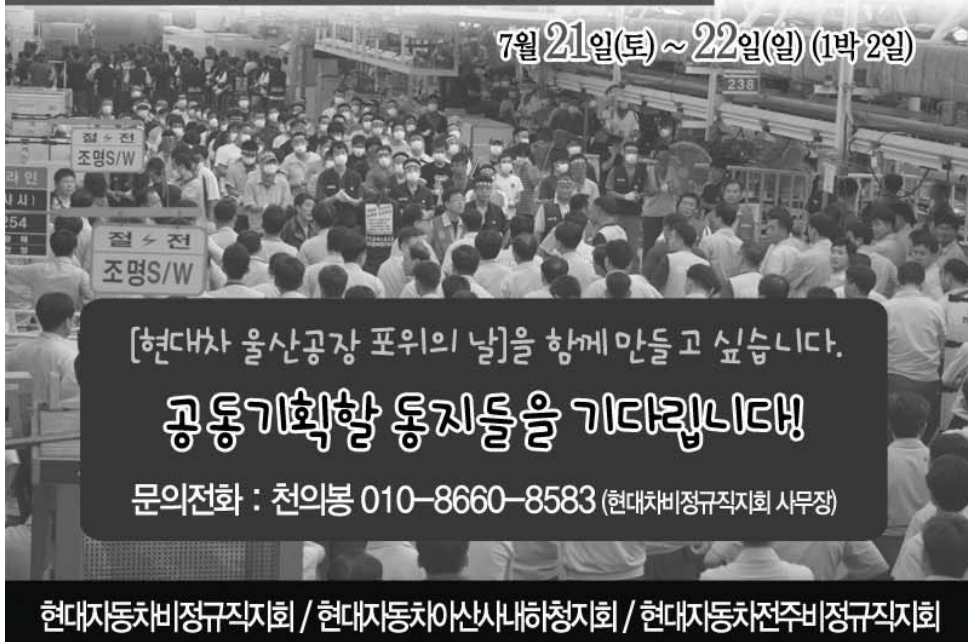
7월 22일은 불법파견 투쟁 도화선이 되었던 대법원 판결 2년째 날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대자동차주는 정규직 전환은 고사하고, 1,564명 비정규직을 집단해고하고, 불법파견 증거를 은폐하는 꼼수를 부리며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는 지속적인 고통을 감수하고 있고, 현대차는 합법적인 하청공장으로 변신하려 합니다.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범죄자 정몽구는 단죄해야 합니다. 850만 비정규직 힘으로 정몽구를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투쟁에 힘을 보태주시요. 반드시 비정규직 철폐를 현실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쟁취!”를 위해 물러섬 없이 투쟁하겠습니다.

정몽구 구속촉구 20개 도시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7월 18일(수) ~ 20일(금) (2박 3일)

100만인이 지지하는 현대차 울산공장 포위의 날

7월 21일(토) ~ 22일(일) (1박 2일)



[현대차 울산공장 포위의 날]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공동기획할 동지들을 기다립니다!

문의전화 : 천의봉 010-8660-8583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사무장)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 현대자동차이산사내하청지회 /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

[기고] 쌍용자동차투쟁, 우리의 힘을 바탕으로 해결할 것인가? 저들에게 ‘해결’ 되어질 것인가?

강종숙 (학습지노조 위원장)



그도 그럴 것이 해고로 인해 한 사업장에서 (확인된 것만) 22명이 죽음에 이른 것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첫 죽음이 알려진 이후 21명의 죽음까지는 지금처럼 대중적 추모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기사 한 줄 신지도 않았다. 그 죽음에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이도 하나 없었다.

그런데 22번째의 죽음을 맞닥뜨리고 나자 세상이 갑자기 달라졌다.

22명의 죽음…….

이제 쌍용자동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22명의 죽음과 대한문 앞 분향소이다.

2009년, 2646명의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77일간 공장을 점거하며 옥쇄파업을 전개했던 투사들, 그 동료들과 가족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대중의 뇌리에 가장 깊이 각인되어버린 것이다.

77일 투쟁, 희망텐트촌, 희망뚜벅이, 희망광장, 대한문 분향소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세상이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맞서 2009년 77일 투쟁을 결사적으로 전개했고, ‘패배’이후에도 계속

● ● ● ● [기고] 쌍용자동차투쟁, 우리의 힘을 바탕으로 해결할 것인가? 저들에게 ‘해결’ 되어질 것인가?



가 자행되고 있었지만 온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할 만큼 ‘고통분담’(실상은 노동자 고통 전담), ‘나라 살리기’(실상은 자본가 살리기) 이데올로기 광풍은 거셌다. 거기에 일조한 것이 당시 민주노총 상층 관료들이었다. 그들은 자본가들과 똑같이 ‘고통분담’, ‘나라 살리기’ 이데올로기를 공유한 채 노동자들이 해고되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속수무책 지켜보았다.

로 먹지도, 씻지도, 잠을 자지도 못하면서 근래에 찾아볼 수 없었던 전투성을 보여주며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했다. 해고라는 사회적 타살에 맞서 말 그대로 “목숨 걸고” 투쟁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정리해고는 그도입부터 지금까지 자본이 합법적으로 써먹어 온 자본의 위기탈출 수단이자 노동조합 탄압의 무기였다. 이러한 정리해고를 막아내지 못했을 때 노동자들의 삶이 파탄 났고 노동조합은 몰락했고 살아남은 자들의 노동조건은 가혹해졌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정리해고에 맞서 전개했던 투쟁들이 모조리 패배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어려운 싸움이라는 말이다.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는 것이 이토록 어려워진 것은 바로 이 조항이 법에 명시된 때가 지난 1997년 IMF구제금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직후였기 때문이다. 이미 그 당시 ‘명예’퇴직, ‘희망’퇴직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채 무더기 해고

그런데 당시 여당이었던 현재의 민주통합당이 이제야 분향소에 찾아와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는가? 그리하기에는 그들의 정권 10년 동안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고 비정규직으로 몰락하고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이에 맞서다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경찰에 짓밟혔고 노동자 가족들의 삶이 파탄 났다. 멀리까지 갈 것도 없이 지난 2009년 77일 투쟁 과정에서 이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정확하게 고통전담, 자본가 살리기에 입각한 행동이었지 결코 정리해고 철폐, 해고 철회가 아니었다.

쌍용자동차, 강정마을,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 SKY ACT

그런데 대한문 분향소 설치 이후 정리해고 철폐보다

● ● ● ● [기고] 쌍용자동차투쟁, 우리의 힘을 바탕으로 해결할 것인가? 저들에게 ‘해결’ 되어질 것인가?

하는지, 얻을 수는 있는 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싸우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용산참사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것과 원죄를 묻지 않고 그 원인 발생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를 망각한다면, 설사 가장 잘 되었을 때 강정마을과 용산참사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제2, 제3, 제4의 강정마을과 용산참사가 일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쌍용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쌍용차 범대위) – SKY ACT의 확대버전

전국적 쟁점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000 범대위가 무수히 결성되어 왔다. 당사자들만의 힘으로는 국가와 거대자본에 맞서 싸울 수 없기에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상황전개가 이루어지곤 한 것이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범대위가 꾸려지는 순간 당사자는 1/n의 발언권과 표결권만을 인정받게 된다. 아니 실제로는 명망가와 일명 ‘선수들’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고 하는 편이 정확히 맞을 것이다.

당사자들이 투쟁경험이 없거나 문제를 해결하기에 힘이 부족할 경우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범대위 구성단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원이 늘어나기에 힘이 된다고보다는 온갖 정치적 견해를 가진 – 심지어는 자본가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견해까지 – 단

체와 개인이 결합하면서 당연하게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방안이 거론되고 결국에는 당사자에게 ‘현실적’ 해결책을 수용하라는 압박과 강요가 따르게 된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처음에 내건 요구는 양상하게 빼대만 남고 또 다른 문제를 안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이러한 상황전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안은 명확한 노동자계급 정치에 입각해 조직된 노동자계급운동의 존재 말고는 없다. 지금 당장 이러한 조직이 없다면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하면서 분자를 키워 5/n, 10/n……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최근 결성된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투쟁단’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것도 유력한 방안일 것이다. 이들과 함께 현재 범대위 주관으로 ‘더 넓게’에만 치중하고 있는 전술을 탈피해 ‘더 깊게’를 동시에 추구하는 투쟁을 전개해야만 범대위의 최대 약점으로부터 발생하는 재앙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

5대 요구

- ▲ 해고노동자 전원복직
- ▲ 살인진압 책임자처벌
- ▲ 회계조작 진상규명·책임자처벌
- ▲ 희생자 명예회복·대책수립
- ▲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 ● ● ● [기고] 쌍용자동차투쟁, 우리의 힘을 바탕으로 해결할 것인가? 저들에게 ‘해결’ 되어질 것인가?

지 않은 노동자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희망버스 이후 희망텐트촌, 희망뚜벅이, 희망광장, 희망자전거, 희망밥차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희망’들이 있었다. 이 희망은 노동자들의 것이었다.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한 희망이었다. 그러나 아직 그 희망은 당장 손에 잡힐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원칙이 아닌 또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하는 동요를 낳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투쟁의 역사와 경험을 통해 똑똑히 알

고 있다. 결국 다수의 희망이 이길 것이라는 것과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울 정도로 늦게 올 수도 있지만 그 희망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판도라의 상자에서 모든 재앙과 불행의 씨앗들이 튀어 나간 후에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것도 바로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은 한 줌 자본가들의 것이 아니라 절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지 않겠는가? **혁명**



혁명의 광고

정리하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

매주 수요일, 공동투쟁 문화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세 대담] 유명자,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을 말한다.



이번 <혁명> 2호에서는 재능지부 유명자 지부장과의 정세 대담을 실게 됐다. 이 대담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첫째는 지난 7월 4일 출범한 ‘비정규직·정리하고·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투쟁단’에 대해 알고자 했다. <혁명>은 장투사업장이라 불리는 투쟁영역이 현 노동자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투쟁 당사자(주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장투사업장이야말로 야권연대 세력들이 강조해 온 반MB 투쟁을 실제로 형성하고 이끈 핵심 동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비정규직·정리하고 철폐 투쟁을 되살려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장투사업장이 아니었으면 ‘희망 시리즈’ 투쟁도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며, 그 규모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공식노조가 하지 못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둘째 <혁명> 2호는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을 주제로 한 이 대담과 함께 쌍용자동차투쟁, 현대차비정규직투쟁을 조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세 투쟁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지금보다 더욱 목적의식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그럴 때에만 지금 민주노총이 말하고 있는 총파업투쟁이 그나마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독자들에게는 이 세 기사를 함께 읽어줄 것을 권한다.

셋째 노혁추는 최근 “(가칭) 노동자 독자 정당 건설 공동행동”을 공개제안 했다. 이 제안의 취지와 목적은 ‘자본가 정당과 단절, 야권연대 반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이루기 위한 ‘공식기구’를 결성하자는 것이다. 지금 존재하는 모든 노동자투쟁, 앞으로 펼쳐나가야 할 모든 노동자투쟁은 ‘자본가 정당과 단절, 야권연대 반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기치로 해야 한다. 특히 장투사업장이 그 선두에 서서 이를 확산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MB투쟁을 형성하고,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 투쟁을 되살려 냈듯이 말이다.

위와 같은 기획 하에 현재 투쟁사업장 공동투쟁과 관련하여 유명자 지부장의 경험, 문제의식, 판단, 전망을 듣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대담을 위한 질문지를 만들기 전에 먼저 유명자 지부장이 이 시점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대략적으로 타진했다. 대담을 위한 ‘질문’ 내용은 거기에 기초해서 정했다. [편집자]



혁명 : 흔히 장기투쟁사업장(장투사업장)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투쟁사업장들이 있다. 이들 사업장 노동자들이 이토록 오래 투쟁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무엇이고 현안 문제는 무엇인가?



노무현 정권시절인 지난 2006년 3월 17일 코오롱 본사 점거농성에서 최일배 위원장이 커터칼로 팔목 동맥을 자르는 자해를 시도하자 조합원들이 만류하고 있다. 당시 최일배 위원장은 유언장을 작성한 상태였다.

유명자 : 흔히 이명박 정부의 폭압적인 노동탄압과 민주주의 말살로부터 모든 문제를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재 장투사업장 가운데 가장 오래 싸우고 있는 사업장이 코오롱인데 8년이다. 즉 노무현 정부 때 정리해고 되어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등장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김영삼 정부가 시도하다 전국적이고 대중적인 총파업에 밀려 실패한 노동법개악을 다시 추진했고 실제로 노동법이 개악되었다. 이 때 정리해고조항,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서 타임오프, 복수노조 등이 시행되면서 많은 현안사업장들이 속출했는데, 이는 노사관계 로드맵,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이라는 일련의 계획 속에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며 자본주의의 위기를 탈출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체 노동자들이 공격 대상이었고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사업장들은 그러한 총자본의 총체적인 공격에도 굴복하지 않고 끈질기게 투쟁하는 것이고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노동기본권 등 모든 문제가 망라되어 있다.

혁명 : 각 투쟁사업장들의 상태와 투쟁의 양상은 어떠한가?

유명자 :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고립분산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 투쟁의 양상 또한 수세적으로 거점농성장을 유지하며 투쟁문화제와 집회를 하는 정도이거나 그나마 농성장도 없이 공장 밖으로 밀려나와 소수의 투쟁대오를 유지하며 지난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혁명 : 각 단사의 현안 문제가 다른 듯이 보이지만 크게 보면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의 문제로 보인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낼 방법이 있다고 보는가?

유명자 :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투쟁사업장은 물론 전체 노동진영에 대한 총자본의 총체적이고도 파상적인 공격은 장기간 치밀한 전략 하에 입체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노동진영 역시 이에 맞서 총노동전선을 치고 대응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지고, 대공장과 중소사업장이 갈라지고, 지역 연대도 붕괴되면서 각개격과 당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너무 뻔한 소리 같지만 노동자는 하나라는 정신으로 단결과 연대의 기풍을 재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현재 투쟁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주체들이 먼저 공동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에 입각한 실천들을 모색하고 있다.

혁명 : 각각 진행되고 있는 투쟁 사업장들만의 현안 요구들이 있는데 공동투쟁은 가능한가?



유명자 : 언뜻 투쟁의 원인, 투쟁 대오의 조직력, 업종의 특성, 투쟁 기간이 각각 다르기에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노동자들도 자본가들처럼 단결하지 않으면 모두 각개격과 당할 수밖에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기억하고 공동투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실제 투쟁사업장 노동자들 대부분이 처음 투쟁 시기에는 해당 자본을 상대로 하는 대응전술을 주로 고민한다. 물론 이러한 전술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점차 투

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서면 노동자들은 투쟁 속에서 현재 투쟁의 의미를 깨닫고 의식의 변화·발전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자각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의식의 성장 속에서 개별 자본과의 투쟁을 넘어서는 또 다른 문제의 근본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동투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다른 투쟁 사업장들과의 연대를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올해에만 ‘희망 발걸음(뚜벅이)’, ‘희망 광장’등의 공동투쟁을 경험한바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주 다시 10여 개의 투쟁사업장이 모여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투쟁단’을 발족시키고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혁명 : 이번 공동투쟁이 이루어진 과정이 궁금하다.

유명자 : 올해 초 전개된 ‘희망 발걸음(뚜벅이)’, ‘희망 광장’ 투쟁 이후, 이들 공동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결의 있고, 밀도 있는 투쟁의 흐름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있었다. 평가회의, 토론회, 간담회 등을 진행했으나 쉽지는 않았다. 그러다 지난 6.16일 ‘함께 걷기’ 투쟁이 진행된 날 몇몇 투쟁사업장 대표자들이 모여 다시 한 번 공동투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공감대를 확인하게 되었고, 더 많은 투쟁사업장들과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자는 의견이 제안되어 투쟁사업장 대표자와 단체 활동가들 30여명이 1차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난 7월 4일 ‘비정규직·정리해고·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투쟁단’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하여 뜻을 같이 하는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결의로 공동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혁명 : 공동투쟁에 대한 투쟁사업장들의 결의 수준은 어떠한가?

유명자 : 아직은 투쟁사업장 주체들마다 공동투쟁의 취지와 의미를 공감하는 데 있어 온도차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모두 공동투쟁의 필요성만큼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또 지난 두 번의 공동투쟁을 경험한 단위들의 인식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볼 때 공동투쟁이 진행될수록 처음 공동투쟁을 경험하는 단위들도 빠르게 의식의 전환이 있을 것으로 본다.

혁명 :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벌이는 공동투쟁의 목표는 무엇인가?

유명자 : 공동투쟁단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조탄압 분쇄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공동투쟁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결국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따라야 하고 이는 개별자본과의 관계를 넘어 정치권력의 문제를 제기한다.

혁명 : 올해 두 차례의 공동투쟁을 통해서도 많은 투쟁사업장의 현안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지난 주 시작한 공동투쟁단의 활동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공동행동의 성과를 무엇이라 보는가?

유명자 : ‘희망 광장’투쟁에서도 그러했듯이 이번 공투단 역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투쟁계획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공동투쟁을 통해 정치적으로 많은 각성을 했다. 또한 공동투쟁을 경험하기 이전보다 보수야당은 물론 이른바 진보정당의 본질에 대해서도 더 명확하게 알게 되면서 진정으로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갈망과 고민이 깊어지게 된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과는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다 널리 알려낼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예전보다 더 큰 연대를 이끌어 내게 되었고 이를 통해 다시 주체들이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혁명 : 긍정적인 지점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공감이다. 그러면 지난 공동투쟁의 경험에서 아쉬웠던 지점은 무엇인가?

유명자 : 우선 조직된 민주노조운동의 지원이 많이 부족했던 지점이다.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조직노동자운동의 역사와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이 그만큼 전진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민주노총은 투쟁의 구심이기보다는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투쟁을 회피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렇게 민주노총이 보수화되고 관료적으로 변모하면서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운동에 대해 지지와 지원

을 모색하기보다는 공식적인 기구를 통한 결의 여부부터 따지고 들어오고 그렇지 못하면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못 본 체하기까지 하는 지점이 정말 아쉬웠다. 투쟁사업장 노동자들 모두 민주노총 조합원이기에 더욱 그러했다.

다음으로 큰 판에서의 투쟁경험 부족으로 투쟁기획이나 투쟁전술 생산에 투쟁사업장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 한 지점이다. 당장은 부족하고 영성하더라도 그러한 경험을 직접 했을 때 더 많이 배우고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투쟁사업장 동지들은 평소에 묵묵히 맡은 일을 다 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로 굶은일에 앞장서는 모습, 그리고 투쟁 상황에서 결코 몸을 사리지 않는 모습 등을 통해 아쉬운 지점과 약점을 훌륭하게 극복해 냈다.



혁명 : 이번 공동투쟁단 활동을 계기로 공동투쟁에 결합한 단위사업장 노동자들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는가?

유명자 : 무엇보다도 승리의 경험을 통해 공동투쟁의 의의를 실감했으면 좋겠다. 만일 이번 공동투쟁으로도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 짓지 못한다 할지라도 공동투쟁의 경험을 발판으로 노동자들이 고통 받는 근본적인 원인, 자본과 한 통속인 정부와 국가기구의 본질에 대해 명확히 파악해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혁명 :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공동투쟁은 투쟁사업장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방법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는가?

유명자 : 일단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희망 투박이 때 세종호텔 동지들이 승리를 경험했다. 세종호텔은 그 직전까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이었다. 하지만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한 후 어느 사업장보다 모범적으로 연대투쟁에 결합하고 있다.

또 공동투쟁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전체 노동자계급에게 전파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은 우리 사업장에 현안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는 모든 노동자들의 삶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타격을 가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노동자는 없다. 이들에게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에 맞서 싸우면서 체득한 경험을 온몸으로 알려내고, 곳곳하고 끈질기게 싸워나가는 모습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이 투쟁할 수 있고 투쟁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투쟁의 의의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문 앞 생용지동자 분향소

혁명 : 다시 이번 공동투쟁단의 문제로 돌아가서 질문을 하겠다. 공동투쟁단의 하루 마무리 일정이 대한문에서의 투쟁문화제라고 알고 있다. 이렇게 결정된 데에 이유가 있는가?

유명자 : 현재 쌍용자동차 투쟁은 노동과 자본 양쪽 모두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작년 한진중공업 투쟁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다. 아니 오히려 그 때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두 투쟁 모두 자본주의 체제에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정리하고 철폐와 맞닿아 있지만 쌍용차 투쟁은 현재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완강하게 싸워 오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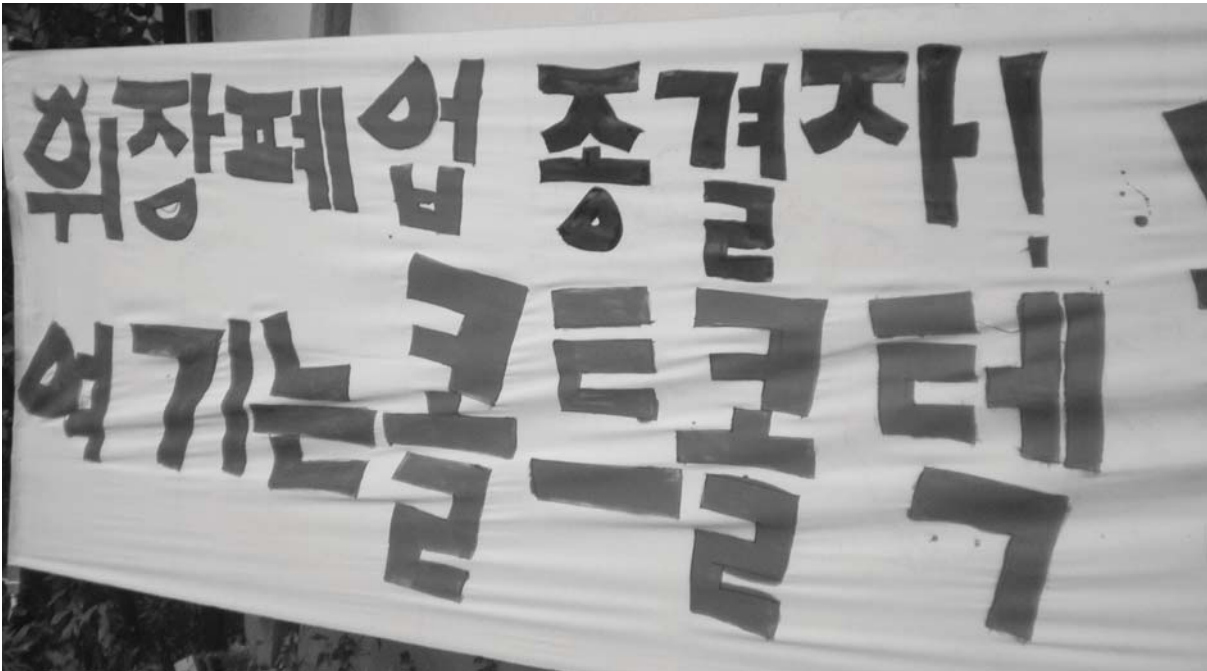
한편 자본가정당들이 정리하고 요건강화 운운하며 본질을 비껴가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보다 근본적인 답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서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한진중공업이든 쌍용자동차이든 누구의 승리로 결판나느냐에 따라 다른 많은 투쟁사업장의 결과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역시 서로가 잘 알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작년 광화문 KT 앞에서의 공동투쟁에 결합한 사업장들이 각자 자신들의 사업장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한진중공업 문제해결에 거의 대부분의 역량을 투여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한문에서의 마무리 일정을 결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주요한 이유는 이러한 노동자계급 고유의 계급적 연대의식과 실천의 강화를 통해 현재 쌍차범대위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쌍용자동차 투쟁을 다시 노동자들이 중심에 서는 투쟁으로 변모시켜 나가는 데 있다.

혁명 : 지난 공동투쟁에서 아쉬웠던 지점으로 민주노총의 역할을 꼽았는데 이번 공동투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가?

유명자 : 솔직히 투쟁사업장(특히 장투사업장)은 총연맹이나 산별연맹 등 상급단체에게는 ‘굳은살에 박힌 작은 가시’와 같다. 크게 아프지 않으니 굳이 빼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다가 가끔 한 번씩 돌아보는 존재라고나 할까? 장투사업장 문제가 어떤 계기로 인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를 때나 혹은 투쟁 주체들의 고강도 투쟁이 있을 때 뒤늦게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작년 희망버스에 대한 결합과정과 실천이 그러했고 현재 쌍차 대한문 분향소 투쟁에 대한 결합과 실천 역시 그러하다. 그나마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자동차처럼 전국적 쟁점을 형성하지 못하는 장투사업장들에 대한 태도는 더욱 심각하다.



혁명 : 그렇다면 민주노총과 각 산별연맹이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경찰들이 쌍용자동차 분향소를 폭력 침탈하고 있다.

유명자 : 투쟁사업장들이 지난 ‘희망광장’ 투쟁을 전개했을 즈음과 쌍용자동차 동지들이 대한문 분향소를 설치하던 시기는 4. 11. 총선과 맞물리는 시점이었다.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조직된 민주노조 상층간부들은 현장노동자들로부터 한참 떨어진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방침을 밀어붙이고 반MB 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총선에 올인 하면서 민주통합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운동에까지 발 벗고 나섰지만 ‘희망광장’에도, 대한문 분향소가 침탈당했을 때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식의 잘못된 실천 때문에 이른바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진보정당들이 참패를 했고 그나마 당선된 후보 가운데 현장노동자 출신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따라서 민주노조 상층간부들은 현재의 정치와 그에 입각한 실천을 일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엄호하고 소속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첫 번째 사업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정작 현장이 붕괴되는데 무슨 진보정당 운동이 가능하며 어떤 노동자들이 그 진보정당을 지지할 것인가?



혁명 : 민주노총의 8말9초 총파업에 대해 투쟁사업장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유명자 : 속된 말로 이른바 ‘뺑파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지난 6월말 경고총파업도 당시 총파업을 전개하던 건설노동자 대오가 없었다면 제대로 된 경고조차 불가능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나마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들이 선도적으로 투쟁에 나서면서 규모와 내용면에서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것은 큰 성과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총파업 돌입의 기운을 불러일으켜야 하고 그러한 실천에 복무하고자 투쟁사업장들이 앞장서서 이번 공동투쟁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 중앙과 각 산별연맹들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즉생의 각오로 반드시 힘 있는 총파업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예전처럼 국회일정이나 선거일정에 맞춰 투쟁돌입과 그 수위를 조절하면서 노동자들을 동원수단으로 치부한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혁명 : 마지막으로 현재 투쟁사업장을 둘러싼 연대의 움직임에 대한 평가지점은 무엇이며 그 속에서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어떤 실천을 전개해야 한다고 보는가?

유명자 : 작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를 통해 홀연히 등장한 ‘희망버스’로 대변되는 ‘사회적 연대’의 기운은 아직도 견재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투쟁주체들이 이 흐름을 견인해내지 못한다면 2008년 촛불처럼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연대’는 노동의제를 확산시켜 내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일조할 수는 있지만 노동의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자발성으로 폭발한 힘은 훈련되고 조직되지 않으면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자발성을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정확하게 투여하고 철저하게 세상을 바꾸는 데 복무하게 만드는 것은 조직된 노동자운동의 몫이다. 장투사업장 노동자들은 지난한 투쟁과정 속에서 단련되어졌기에 그러한 역할을 맡는 데 적임자다. 물론 이들 장투사업장 노동자들도 자발적인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부터 배워야 하고 무엇보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와 만나야 한다.

이번 공동투쟁단의 실천을 통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는 데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하고 노동자계급투쟁의 선봉을 자임하는 노혁추를 비롯한 정치조직들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혁명**



〈유명자 동지 사진출처 : 블로그 “그곳에 가고 싶다”〉

[기고]

노동시간 단축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향한 계급대리전쟁

-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7~8월 총파업의 의미와 과제 -

박 점 규

(비없세 집행위원, 전 금속노조 비정규국장)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연쇄 총파업을 시작으로 한 민주노총의 6월 경고파업이 7월 금속노조와 8월 민주노총 총파업의 서막을 알리며 전국을 강타했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4대 보험 전면 적용 등 이명박 정권을 향한 요구는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전국적으로 물류를 멈추고, 공사 현장을 중단시키며 전 사회적 관심

과 지지를 모았고, 사용자들을 압박해 임금(운임)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이끌어냈다. 무엇보다 함께 싸우면 정권과 자본의 탄압을 막아내고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이어질 노동자들의 투쟁에 자신감과 용기를 고취시키는 소중한 역할을 해냈다. 6월 28일 민주노총의 경고파업과 결의대회에 3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모여 함께 투쟁을 결의함으로써 이후 7~8월 총파업으로 향하는 중요한 교두보를 만들어낸 것이다.

화물-건설노조 파업 7~8월 총파업의 교두보

민주노총 7~8월 총파업의 중심은 이제 금속노조로

넘어갔다. 금속노조는 올해 △노동시간 단축과 주간연속2교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노동3권보장과 정리해고 철폐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등 4대 핵심 요구안을 내걸고 임단협 교섭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6월 26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벌이고 있는 9차 중앙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했고, 7월 2일 노동위원회 조정신청¹⁾을 거쳐 7월 10~11일 쟁의행위찬반투표를 벌인 후 7월 13일 1차 파업과 20일 2차 파업을 벌인다.

현대차지부도 6월 28일 9차 단체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한 후 7월 2일 조정신청, 3일 쟁의대책위원회 전환을 거쳐 금속노조의 파업찬반투표와 파업 일정에 따라 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기아차지부도 28일 7차 단체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했으며, 한국지엠지부 역시 금속노조의 일정에 맞춰 파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도 7월 1일 조합원 긴급총회에 이어 5~6일 파업찬반투표를 벌이며, 아산과 전주는 금속노조 찬반투표 일정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금속노조와 완성3사 교섭결렬
- 7.13 1차 총파업

2012년 금속노조의 요구와 투쟁은 계급대리전의 성격을 갖고 있다.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총자본과 총노동이 노동시간단축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라는 한국사회의 핵심 쟁점에 대해 계급을 대리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 자본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전쟁에서 쉽사리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이 이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현대차그룹을 넘어 전 산업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밤샘근무 폐지와 모든 비정규직 정규
직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8조 1천억이라는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낸 현대차를 필두로 현대차그룹은 사상 최대의 임금인상과 성과금을 뿌리며 금속노조의 공동파업 전선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현대차자본은 그룹 내에서 조직력이 가장 취약한 노동조합을 타깃으로 삼아 금속노조의 투쟁 전선에서 이탈시키려 하고 있다. 현대차자본은 현대위아와 현대엠시트를 제물로 삼았다.

현대위아는 기본급 94,000원, 성과급 300%+750만원(1,400만원)을 던져 노사 간에 잠정합의하고 6월 29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시켰다. 현대위아 배인규 대표이사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려준 노조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현대위아는 예년처럼 정규직 임금과 일시금의 70%를 비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것을 합의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현대위아 역시 현행법상 불법과견이 확실한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창원공장에 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금속노조의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인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철저하게 외면했다. 현대위아의 나머지 3개 공장은 정규직이 관리자들뿐이고 생산라인은 비정규



현대위아 노사가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열린 '노사 소통의 날' 행사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던 배인규 대표이사(왼쪽)와 정평진 노동조합 지회장

노조는 6월 29일 중앙위원회에서 조기타결사업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현대차 계열사 물량공세로 투쟁전선 이탈

노동시간단축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라는 총자본과 총노동의 계급대리전의 요구는 한 두 차례의 파업으로 쟁취할 수 없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에서 보듯이 지금 이

직으로 운영되는 야만적인 '비정규직 공장'이다. 그러나 노사협조주의와 대중융합주의에 빠진 노조 집행부와 무능력한 금속노조는 이 광경을 눈뜨고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의 현대엠시트도 6월 27일 기본급 84,670원 인상, 정년 연장, 일시금 4백만원+200%의 내용으로 잠정합의하고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회사측은 “제시안을 이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처럼 전향적인 금액은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에 앞서 5월에는 현대다이모스, 현대오토넷이 임단협을 타결하고 투쟁전선에서 먼저 이탈했다.

충남지부 현대엠시트지회는 임단협이 타결돼도 금속노조의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시간단축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라는 계급전쟁에서 이탈했고, 앞으로 현대차그룹 계열사와 현대기아차 부품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금속

명박 정권은 무덤으로 가고 있고, 탐욕의 자본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 사회적 요구와 함께 조합원들의 '실리'를 쟁취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전선과 완성3사 투쟁전선,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전선을 중심으로 8월로 이어지는 완강한 파업전선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6월 29일 98차 중앙위원회에서 심각한 결정을 하고 말았다. 금속노조는 전국적 투쟁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2월 27일 32차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중앙교섭 타결 없이 지부·지회교섭 타결 없다”는 타결방침을, “지부·지회는 가능한 중앙교섭 타결 후 지부·지회교섭을 타결한다. 단, 지부운영위의 승인을 거쳐 중앙교섭 전 지부·지회 교섭타결을 열어두되 타결시점은 7월 20일 이후에 한다”로 수정했다.

요약하자면, 금속노조의 두 차례 파업만 하고 나면 노동시간단축이나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라는 요구와 무관하게 지회별로 타결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대위이나 엠시트처럼 회사가 돈을 왕창 뿌리면 중앙교섭이나 지부집단교섭과 무관하게 타결하라는 것이다. 수정된 타결방침은 대대적인 ‘돈잔치’를 통해 금속노조의 투쟁전선을 교란시킨다는 현대차자본의 계략과 휴가 전 타결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정서가 맞물려 휴가 이후 금속노조의 투쟁을 상당한 수준에서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물론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이 살아있고 파업권이 유지되지만, 예년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현장의 동력을 상실한 투쟁지침은 교육시간, 총회 등 형식적인 수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부품사가 주축인 금속노조 지역지부의 경우 조직력이 높아 전국의 거리에서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사회적 지지여론을 만들어갈 수 있고, 대공장의 귀족노조 이데올로기에 함께 맞설 수 있다. 그러나 휴가 전 집중적인 타결이 이뤄지면 8월에는 금속노조와 완성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이 남게 되고, 고립분산적인 투쟁이 될 위험성이 높게 된다.

금속노조 타결방침 후퇴, 심각한 투쟁전선 이탈 가능성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7~8월 총파업에서 가장 중

요한 역할을 해야 할 현장은 다름 아닌 현대자동차다.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리전이 가장 첨예하고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바로 현대자동차이며, 노동시간 단축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장이 바로 현대차이기 때문이다.

첫째, 현대차지부는 무쟁의라는 굴종의 사슬을 끊어 내야 한다.

수정된 타결방침은 대대적인 ‘돈잔치’를 통해 금속노조의 투쟁전선을 교란시킨다는 현대차자본의 계략과 휴가 전 타결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정서가 맞물려 휴가 이후 금속노조의 투쟁을 상당한 수준에서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현대차는 2009년부터 3년 동안 내리 무쟁의를 했고, 현대중공업은 지난해까지 16년째 무쟁의를 이어가고 있다. 6월말 타결한 현대위아 회사는 18년 무쟁의라는 보도 자료를 뿌렸고, 경제신문을 비롯해 언론이 이를 크게

다루면서 무쟁의를 선동하고 나섰다.

현대자동차의 무쟁의 역사는 2007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현대차지부 이상욱 집행부는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현장발의로 결정된 6월말 한미FTA 반대 총파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회사는 회사 내의 입단협에서 파업을 하지 않아 무쟁의를 달성했다며 조합원들에게 무상주 30주를 지급했다.

이경훈 집행부 시절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무쟁의가 계속됐고, 조합원들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135주를 무쟁의의 대가로 지급받았다. 지난 주 평균주가인 1주당 240,000원으로 계산한다면 주식의 현재 가치는 무려 3240만원에 이른다.

2009년 쌍용차 77일 점거파업, 2010년 현대차 비정



규직 25일 점거파업, 2011년 김진숙 지도위원 85호 크레인 309일 고공농성이 벌어졌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악법이 강행됐지만 현대차지부는 이를 외면하고 1천만원이 훨씬 넘는 일시금과 무쟁의에 따른 무상주에 합의하면서 계급의 대의와 연대를 외면했다.

지난 4월 26일 현대차 아산공장 임태순 공장장은 조합원 부인들의 행사에서 “지금까지 지급된 주식은 무쟁의의 보상 차원이다. 이를 더 받고 싶으면 올해 파업하지 마라”고 말했다. 조합원들을 ‘돈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조합원들을 부추겨 집행부를 흔들겠다는 의도였다.

현대차 자본은 6월 28일 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현대차지부가 금속노조의 정치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투쟁을 꾀고 교섭한다며 ‘금속노조 꺾맞추기 정치파업’이라는 대대적인 현장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에 대해 7월 2일 현대차지부는 “무쟁의 3년으로 간ding이가 부어 오른 사측의 안하무인이 단체교섭 결렬을 불러왔다”며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4만5천 조합원의 총단결 총투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용문 지부장도 “최근 몇 년의 굴욕적인 노사관계를 끝장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노동자의 자존심을 지키고, 주식과 성과금이라는 눈앞의 이익

이 아니라 고용안정과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진정한 실리와 내일의 이익을 위해, 현대차를 넘어 전체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위해 ‘무쟁의’라는 굴종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둘째, 현대차에서 노사영합주의와 노동자계급 배신의 역사를 종식시켜야 한다.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이 경찰특공대와 구사대의 살인진압에 맞서 에어컨의 물을 받아먹으며 77일을 싸웠을 때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의 연대파업에 함께 했다면 22명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25일간의 점거파업을 하며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했을 때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의 연대파업에 함께 했다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조금의 돌파구라도 열었을 것이다.

2011년 김진숙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위에서 309일을 절규했을 때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과 금속노조가 희망버스를 넘어 희망파업을 만들어냈다면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관심은 조금이라도 달라졌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 5년의 역사에서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는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위해 선두에서 싸웠던 역사가 아니었다. 이제 마지막 기회가 노동운동에게 왔다. 무엇보다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는 지금 당장 집단 계약 해지를 당하고 있는 1564명의 2년 이하 한시하청 노동자들과 전환배치 및 공정블럭화를 통해 잘려나가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단 한



명이라도 비정규직노조에 가입하면 현대차지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싸우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집단가입 운동을 벌여야 한다.

7월 13일과 20일 금속노조 파업, 7월 21~22일 울산 공장 포위의 날에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는 모든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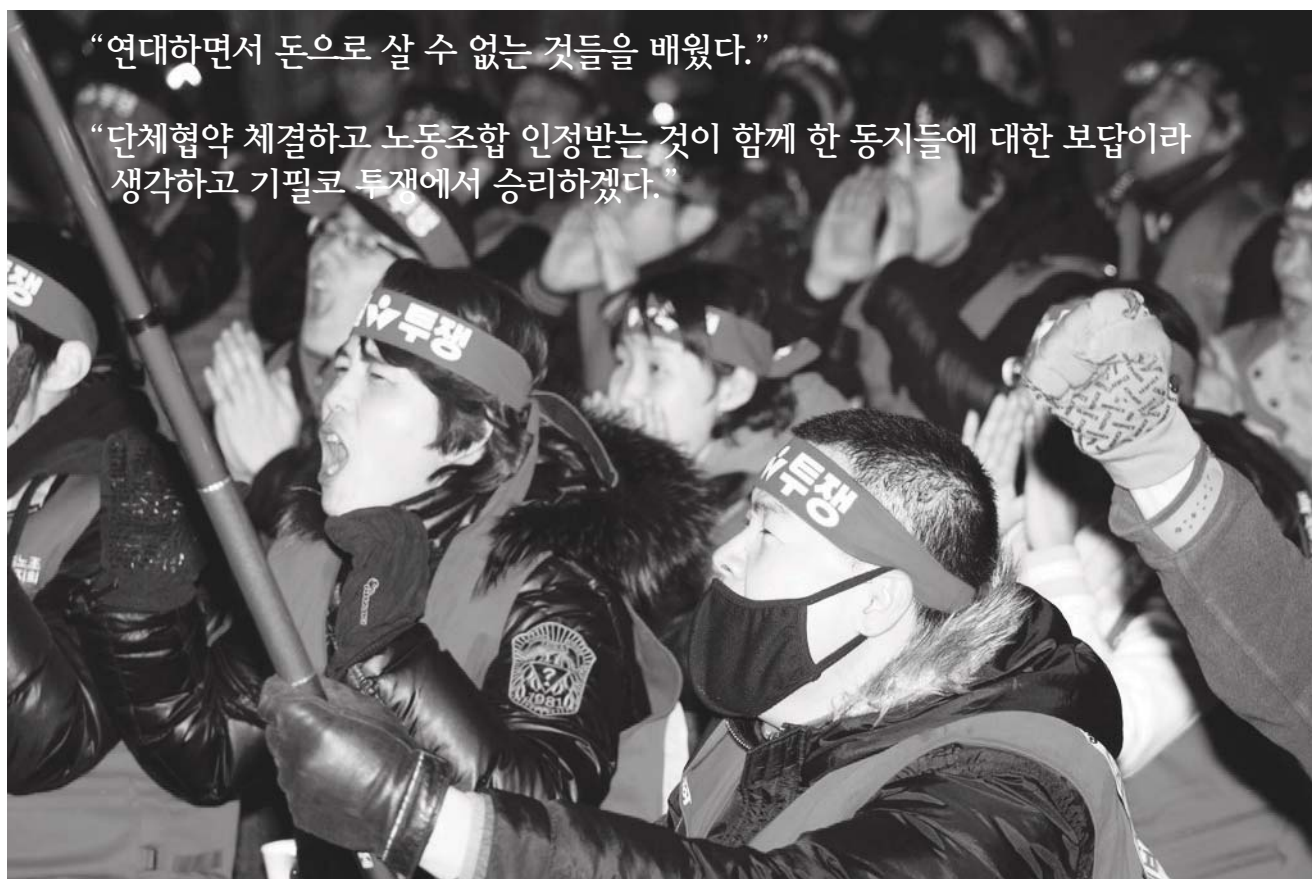
을 다해 투쟁을 전개해야 하며, 여름휴가 이후 더욱 강도 높은 파업투쟁을 통해 주간연속2교대제와 모든 사내 하청 정규직화를 쟁취해야 한다.

지금 전국의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 1700만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를 지켜보고 있다. **혁명**



JW지회 이규삼 쟁의부장 인터뷰

이규삼 (JW지회 쟁의부장) / 임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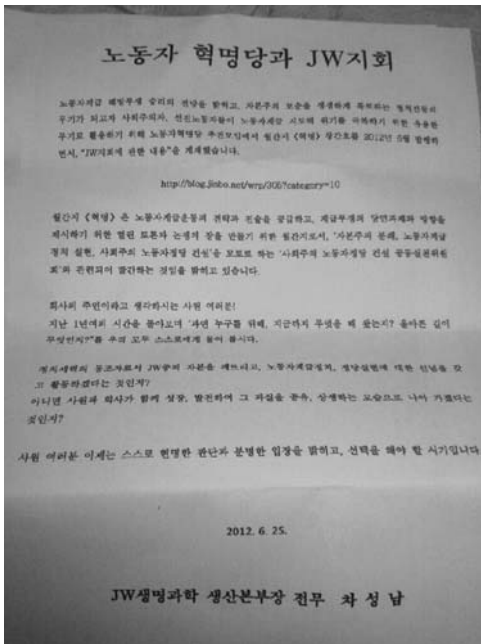
JW지회 이규삼 쟁의부장

이명박 정권 내내 정권과 자본의 탄압으로 인해 기존 노동조합들이 움츠러들고, 정리해고와 노동탄압으로 노동조합이 많이 깨지기도 했다. 하지만 쌍용차 노동자들이 여전히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KEC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복구하고 유성지회도 다시 투쟁을 통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여기에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투쟁하고 있는 코오롱 노동자들과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있다. 그 외에 수많은 장기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정권과 자본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많은 동지들은 투쟁하다 보니 몇 해가 흘렀다고 한다. 10년을 싸울 각오로 처음부터 싸웠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장일 말고 세상 돌아가는 일은 몰랐던 JW지회 노동자들이 지난해 말에 노조를 만들고 6월 14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JW 동지들은 직장폐쇄 기간인 3,4월 상경투쟁 때,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을 만나면서 투쟁의 어려움을 느끼고 좌절하는 것이 아닌, 보다 큰 각오를 한 듯하다. 정권이 누구건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투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세상이 바로 신생 노조가 전면파업으로 나서게 만든 배후 세력일 것이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도 인정하지 않는 자본이야 말로 배후세력이고 분노의 대상인 것이다.

그런데 파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서 JW 자본은 “노동자혁명당과 JW지회”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사내에 게시했다. 사측은 “노동자계급 해방투쟁 승리의 전망을 밝히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생생하게 폭로하는” 〈혁명〉 창간호에서 JW 투쟁을 다룬 것을 두고 비난을 가했다. 하지만 자본가들의 상투적인 수법에도 JW 동지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다.

JW 노동자들의 친구가 JW 자본가들인지 아니면 함께 투쟁하는 연대 동지들이고 사회주의자들인지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신생 노조의 단체협약 쟁취, 노동조합 시수 투쟁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투쟁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긴다. 이러한 이유로 〈혁명〉 2호에서는 JW지회 이규삼 쟁의부장과 인터뷰를 가뭇 속에 단비가 내리는 6월 30일 JW부회장 집 앞 농성장에서 진행했다. 사측이 오는 10월 어용노조를 설립해서 교섭권을 가져가기 전에, 투쟁사업장들의 보다 강력한 연대와 개별 사업장의 파업투쟁에 상급단체들이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투쟁이 승리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임천용)



질문: JW생명과학 회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 달라. 그리고 노동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대답: JW생명과학은 흔히 링겔이라고 말하는 수액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다. 공장은 충남 당진에 위치해 있다. JW생명과학은 중외그룹에 속해있는데, 중외그룹은 제약업계 10위안에 드는 큰 회사다. 우리는 조제부터 멸균, 오버랩, 포장까지 생산부 전 공정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환자의 혈관에 직접 투여되는 수액을 만들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이다.

질문: 지금 전면파업을 진행한지 3주가 되어가고 있는데. 공장에서 노동조건은 어떠했나?

대답: 야식비도 없고, 시간외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관리자들이 여성노동자에게 성희롱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갈수 없다. 휴가를 가고 싶어도 대체인력이 없어서 쉽지 않다. 휴가를 가려면 대신 일할 사람을 만 들어놔야 해서 휴가도 제대로 쓸 수 없었다. 다쳐도 다쳤다고 징계 먹고, 산재처리하는커녕 공상처리한다. 불만이 누적 될 수밖에 없었다.

사측이 부당한 직장폐쇄를 자행한 이후 이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JW지회 동지들



질문: 자본가들은 노동조합을 깨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같은 지역인 충남만 보더라도 대표적으로 유성기업이 있다. 이런 조건 속에서도 신생노조가 만들어졌다. 노조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대답: 노조를 만들기 전에는 다른 사업장 사정들은 잘 몰랐다. 우리 모두는 JW라는 회사에서 참는 데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회사의 불합리한 처사를 참지 못하고 친한 동료들이 회사를 떠나는 것을 보면서, 당장 자신의 일이 아니어도 언제 나의 일로 다가올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제약회사 쪽에는 한국노총 사업장이 많은데 어쨌든 노조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난해 8월에 노조를 만들었고, 지회 설립일은 화섬노조에 가입한 10월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질문: 지난 2월 24일에 사측이 부분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조 설립 이후 직장폐쇄가 있기까지 교섭과 투쟁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대답: 7차례 교섭을 진행했는데 교섭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나오고 성의 없이 진행했다. 사측은 노동법에 나와 있는 교섭도 성의 있게 진행하지 않았다. 단체협약 요구안 90개 조항에서 10%도 합의 보지 못했다. 10%조차도 사측제시안이었다. 노조의 단체협약 제시안도 제약업계의 한국노총 사업장 단체협약과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도 그랬다.

교섭에 진전이 없어서 2월초에 노동부에서 쟁의권 획득하고 준법투쟁을 진행했다. 그리고 23일에 4시간 파업을 진행하자, 사측은 바로 다음날 공격적으로 직장폐쇄를 했다. 그런데 6월초에 법원에서는 회사측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질문: 직장폐쇄 후에 지회는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서울 본사 상경투쟁을 진행했다. 조합원들이 매우 즐겁게 투쟁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지난 상경투쟁에서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대답: 많은 동료들은 JW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직장인 경우가 많다. 많은 노동자들이 사회생활의 시작을 JW에서 한 것이다. 그런데 회사에 불만이 있어도 아무런 말도 못하다가 파업을 경험하고 동료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았다. 노조 만들고 바른 소리 할 수 있게 된 것이 활기차게 보이는 것 같다.

신생노조라서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노조 만들고 나서 보지 못했던 분들이 지원과 격려를 해줘서 큰 힘이 되었다. 충청권에서도 다른 노동자들이 도움을 많이 줬고 지회도 미력하나마 투쟁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

노조 만들고 나서부터 법에 보장되어 있는 단체협상 체결이 왜 안 되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경찰과 공권력이 노동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 연대하면서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다. 투쟁하면서 노동자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었다. 모든 노동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다. 연대하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배웠다. 연대를 가도 피곤함을 몰랐다.

질문: 4월말 상경투쟁 직후 5월 7일에 사측은 74일 동안 유지해온 직장폐쇄를 풀었다. 그런데 한 달여 만에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4월 상경투쟁 당시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에 연대하는 JW 동지들. JW지회 동지들은 상경투쟁을 할 때 마다 수 많은 사업장에 연대하며, 투쟁사업장들에게 연대와 단결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있다.



전면파업에 들어가며 식발 결의 하는 JW지회장과 부지회장

대답: 74일 직장폐쇄 기간에 투입된 비전문 인력과 노조가 2월에 지노위에서 쟁의권을 획득하자 사측에서 인턴 인력을 뽑아 놓은 게 있었다. 공장에 복귀했어도 공장은 인턴 중심으로 돌렸다. 조합원들은 청소만 시키고 전환배치, 대기발령 시켰다. 라인에 감시카메라를 달아놓고 감시하고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압박했다.

5월 중순에는 당진시 중재로 교섭이 추진되면서 지회는 상경투쟁을 접기까지 했으나 사측은 요지부동이었다. 직장폐쇄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도 일정한 힘이 되었다. 오죽했으면 법원도 그런 판결을 내렸겠는가? 사측에게 속았다는 불만들이 파업에 나서게 된 배경이었다.

질문: 파업을 해도 공장에서 밀려나와 있기 때문에 공장이 돌아가는 것 같다. 사측은 2월에 시작된 직장폐쇄 기간부터 사무직, 관리직 직원과 인턴 등을 동원해서 수액을 생산하고 있다. 사측의 말대로라면 JW가 생명존중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생산을 계속 진행해도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

대답: 2월 준법투쟁 때문에 재고가 소진된 상황에서 생산을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재고가 거의 없는 상태로 알고 있다.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수액은 여름철이 성수기라 다른 계절에 비해 많은 생산이 필요하다. 비전문 인력 중심으로 급하게 생산하고 있다. 수액은 알약과 달리 혈관에 직접 투입되기 때문에 생산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공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한다. 숙련된 노동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공장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



질문: 파업 중에도 공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측에 타격을 가하려면 소비를 멈추게 해야 한다고 본다. 수액이 무작위 시민들을 상대하는 일반 소비재와 달리 병원에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만 상대해서도 불매 압박을 넣기가 용이할 것 같다. 환자 가족들이 먼저 걱정할 것 같기도 하다. 지금 상경투쟁 조합원들의 부회장집 앞 농성 말고 다른 활동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지난 7월 4일에 진행된 투쟁사업장 공동행동에 함께 하고 있는 JW지회 동지들

대답: 수액을 납품하고 있는 성모병원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아산병원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산 병원 구매 담당하는 사람 방문해서 JW에서 진행되는 것 이야기했다. 제약협회, 병원협회에서 집회를 했다.

상경투쟁하면서 콜트콜텍, 유성, 재능, 쌍차, 코오롱, K2 투쟁에 연대하고 있다. 파업 전에 SNS, 트위터 등을 배웠는데 아직은 서투르다. 상황이 터지면 그때그때 연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할 때가 많이 있다.

질문: 비싼 동네에서 농성하고 있어서 전체 조합원이 식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대답: 부회장 집 앞에서 농성하면서 식사는 옆 동네 철거지역인 포이동에서 만들어서 조달하고 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항상 고맙다.

질문: 서울에는 장기투쟁사업장과 상경해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대답: 투쟁하는 사람들이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투쟁사업장들이 함께하는 것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하려고 한다.

질문: 아무래도 노숙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인데 벌써 보름이 지났다. 힘든 것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대답: 결혼 한지 얼마 안 된 동지들, 가정을 가진 여성동지들을 생각하면 안타깝다. 비 맞으면서 상경투쟁하는 것은 힘들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게 시끄럽고 불편했는데 지금은 익숙해졌다. 뭐라도 가지고 오는 시민들을 보면 힘이 나고, 당장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지나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

노조 만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적립한 기금도 없고 해서 투쟁자금이 많이 부족하다. JW지회가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많은 것들을 드리지 못했는데도, 다른 투쟁하는 동지들이 많은 도움을 주어서 고맙다. 우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을 인정받는 것이 함께 한 동지들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하고 기필코 투쟁에서 승리하겠다. **혁명**



충남 당진의 JW중외제약,생명과학 노동자들이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주면 주는대로 시키면 시키는대로 일하며 기계처럼 살 수 없었던 우리들은 작년 10월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노조를 만들고 약 2개월동안 사측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우리들의 요구를 수용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교섭요구 중 단 한 개의 조항(55세 정년)만이 합의되었을뿐 노조법이나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도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나 지방노동위원회조차도 사측이 노조를 인정할 자세가 안되어있는 것 같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사측은 기어이 38명의 조합원에게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길거리로 몰아냈습니다. 이 또한도 서산지방법원에서는 불법적 직장폐쇄라며 조합원들을 복귀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용역강제를 불러들여 천막농성장을 같이 같이 짓고 조합원들을 폭행하고 달아나기도 했으며 인사권을 마구잡이로 남용해 징계, 대기발령, 근무시간 및 부서 전환배치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JW 중외제약 이경하 부회장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중외제약 이경하 부회장도 한 사람의 인간이기에 노동자들의 피에 맺힌 절규에 귀를 기울일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진한 희망이었습니다. 이경하 부회장은 피도 눈물도 없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쪽쪽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충남 당진에서 이곳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이경하 부회장 집 앞으로 올라왔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노숙을 하면서 이경하 부회장이 노조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노조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싸워야만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저희들의 투쟁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물품 보내주실 곳 : 서울 강남구 개포4동 1266번지 마을회관



항의전화를 바랍니다!

- ▶ JW중외그룹 본사(02-8406-777)
- ▶ JW생명과학 당진공장(041-351-7600)



후원 및 연대기금 계좌

351-0482-2638-73
농협, 조혜선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JW지회

충남 당진의 JW중외제약, 생명과학 노동자들이 인사드립니다.



인류의 건강문화 향상에 이바지한다며 링겔수액 등 의약품을 만드는 우리나라 굴지의 제약회사 중외제약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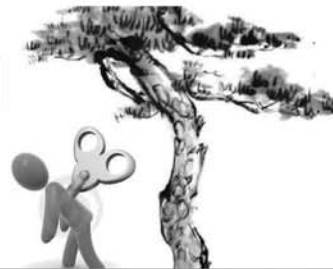


■ 공장인가? 포로수용소인가?

CCTV가 72대 설치되어 있는 기업.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노동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실시간으로 감시·통제되는 기업.

■ 소나무는 양반 대접, 노동자는 노예 취급

부회장이 살고 있는 로텐하우스 이스트빌리지(서울 도곡동 소재)에 살고 있는 1억을 호가하는 소나무. 공장 내 소나무 관리비용 연 수천만원, 그러나 노동자는 까라면 까야만 하는 노예 신세.



■ 신나게 부러먹고 잔업수당 떼어먹고

'바쁘다. 조금만 더 참고 일해라!' 그러더니 몇 폰이나 한다고 잔업수당마저 떼어먹는 기업.

■ 코물은 돈 떼어서 관리자들 용돈으로

노동자들에게 매월 1만원에서 1만5천원씩 가지급금이라는 명목으로 공제 후 그 돈을 관리자들이 마치 자기들 용돈처럼 유용해도 징계는 커녕 오히려 잘 했다고 칭찬받는 기업.

■ 노동자는 길거리로, 회사는 748억 새집으로 이사

그렇게 노동자의 피땀을 쪽쪽 빨아먹더니 지난 6월 서초동에 748억을 주고 빌딩을 매입. 뽕까뽕까한 JW타워, 50억이 넘는 부회장 집, 그리고 그가 타고 다니는 고급 세단들... 노동자들의 노예와 같은 노동이 없었다면 그것이 과연 가능했을까?



- ▶ 문의 및 연락처 : 박경훈지회장(010-8650-6591), 황상호부지회장(010-9040-3163)
- ▶ 이메일 : soja94@hanmail.net
- ▶ 소통카페 : <http://cafe.daum.net/jwone> (다음검색 : jw지회)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JW지회

자본가 정당과 단절! 야권연대 반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 “가칭) 노동자 독자 정당 건설 공동행동” 을 제안합니다!

참담하게도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재창당 수준의 혁신”과 “새로나기”라는 이름으로 통진당이 나아가고 있는 국민정당의 길은 이미 파괴된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에 대고 다시 대못질을 하는 행보에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본가 정치세력인 국참당과의 통합을 통한 통진당 결성, 총선에서 민주당과의 야권연대, 현 통진당 사태 등, 2012년 초부터 진행된 일련의 흐름은 그 동안의 민노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최종 파산을 거듭 확인해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미 노무현정권 시절 민

노당이 열우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을 때부터 독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열망은 공공연하게 배신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래 민노당과 민주노총이 민주대연합 · 반MB 야권연대 기치 아래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과 손잡고 본격적인 계급협조 행보를 펼치면서 이미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표 찍고 돈대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아예 자본가 정당을 지지하도록 몰아간 것입니다.

선거에서만이 아닙니다. 노동자투쟁에서도 타협을 종용하여 사실상 투쟁을 와해시킨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 12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자본의 탄압과 어용의 방해를 뚫고서 영웅적으로 전개한 25일간 공

장점거투쟁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야4당 중재단’이라는 이름의 야권연대에 의해서 깨졌습니다. 민노당, 국참당, 노심조 등 현재 통진당을 구성하고 있는 세력들이 민주당과 합작하여 이렇게 노동자투쟁을 주저앉히고 무너뜨린 뒤 이명박정권 반대투쟁, 한미FTA 반대투쟁 등 총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국 투쟁전선에서 노동자계급을 자본가 정당의 지지부대로 몰아갔습니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은 완전히 무너지고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이번 통진당 사태와 이를 기회로 한 국민정당으로의 ‘새로나기’는 이렇게 이미 계급적 독자성이 말살되고 팔아넘겨진 것을 최종 확인해주는 사태일 따름입니다.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의 파괴와 실종, 공백, 이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노동자운동의 정치 지형입니다. 계급적 독자성을 위해 투쟁해 온 노동자 정치세력으로서 부끄럽지만 숨길 수 없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현주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태로는 대선에서의 야권연대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연대 연립정부수립을 위해 얼마나 더 노동자계급이 부르주아 정치세력의 꼬리로 전락하도록 강요받아야 하는지 모를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진 계급 현실입니다. 정리하고 ·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비롯해 현재 전개되고 있는 투쟁들과 이후의 민주노총 총파업, 사내하청 폐지투쟁 등 이대로 가다간 모든 노동자투쟁이 대선에서 민주당 중심의 민주대연합정부 창출을 위해 종속되고 거기에 복무하도록 강요받는 상황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절박한 계급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계급 독자 정당 건설’을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새롭게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세우기 위해, 새로운 노동자계급 독자 정당 건설을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자본가 정당과 손잡기 위해 팔아넘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회복하는 것, 빼앗긴 계급적 독자성을 수복하는 것은 지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계급의 일반 과제입니다. 노동자운동 내에서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계급협조 고리를 끊어내고 노동자계급의 독자 정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세력, 개인들이라면 누구든 비껴가선 안 되는, 누구도 자기 과제로 떠안아야만 하는 그러한 당면한 계급적 과제인 것입니다.

현재 통진당 사태가 당장은 많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정치 혐오증과 정치적 냉소주의를 더욱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보수우익 세력들의 전방위적인 이념공세와 공안몰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노동자들 사이에 정치적 위축감과 패배의식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되찾는 계급 독자 정당 건설의 과제보다도 민주당, 통진당 등 야권연대 세력들과 함께 보수우익의 매카시즘적 공세에 맞서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우익의 공세에 대해 현재 민주당은 물론이고 통진당과 민주노총 지도부가 보이고 있는 수세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 그 자신들이 강조해 온 반MB/반새누리당 투쟁조차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없는 세력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전선을 명확히 하는 계

급 독자 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의 전면화를 통해서만이 보수우익의 공세에 대항하는 실제 전선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노동자 독자 정당을 결성하라! 노동자운동 내에서 계급협조의 고리를 끊어내고 잃어버린 계급적 독립을 되찾아라! 현 시기 노동자계급의 이러한 절대적인 지상 과제 앞에서는 어떠한 다른 과제도 부차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계급의 일반 과제를 회피하거나 방기하고 내세우는 어느 다른 특수한 과제도 의도와 달리 필시 종파적 위험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노동자 정치조직들, 그리고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를 열망하는 선진활동가들, 야권연대를 거부하고 비타협적으로 투쟁을 밀어가고자 하는 일선의 계급투사들,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는 노동자 독자 정당 건설을 자신의 과제로 부여잡아야 합니다. 계급 독자 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투쟁에 함께 나섭시다. 이를 위해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는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을 향해 폭넓게 결집할 수 있는 공동전선을 가동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노동자계급 독자 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전선’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공동전선은 단지 반통진당 세력들이 모두 모이자는 식의 ‘반통진당 전선’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 합니다. 즉 통진당이 퇴거하여 남겨진 노동자

정치의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공화적인 세력 조합으로는 기존 민노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파산과 실패의 교훈을 올바르게 찾지 못하고 동일한 전철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공동전선이려면 기본적으로 빼앗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수복하는 대적투쟁 전선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투쟁에서, 정세가 제기하는 모든 계급적 투쟁과제에서 계급협조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독자적 대안 정세구심을 구축하고 대자본 · 대정권 전국전선을 펼쳐냄으로써 창당의 계급적 토대를 확보하는 그러한 공동전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엇보다 이 공동전선은 단지 대적투쟁을 위한 ‘공동투쟁체’를 넘어 ‘노동자 독자 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전선’인 만큼 그 안에서 새롭게 건설하고자 하는 당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정치투쟁을 벌여나가는 ‘공적 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창당 단계로 즉각 돌입할 수 있는 공통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동전선 결성의 전제조건과 창당의 전제조건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창당 그 자체는 오직 이 공동전선을 통한 정치투쟁의 결과로써만 사후적으로 최종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분명히 하면서 동지들 앞에 “가칭) 노동자 독자 정당 건설 공동행동”을 제안합니다. 명칭이야 무엇이든 간에 “자본가 정당과 단절! 야권연대 반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 회복과 독자 정치세력화!”를 과제로 하는 공동전선이라는 성격, 그리고 계급 독자 정당 창당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 시점까지 한시

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전선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한다면 이 공동전선에 참여하기 위한 다른 전제조건은 불필요할 것입니다.

“가칭) 노동자 독자 정당 건설 공동행동” 결성을 위한 여타 세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면 될 것입니다. 빼앗긴 계급적 독립을 되찾기 위

한 노동자 독자 정당 건설 투쟁에 동지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현재 긴박한 정세 조건을 감안할 때 최대한 빠른 회답을 기다립니다. **혁명**

2012년 7월 2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왜 지금 ‘당 건설 공동전선’ 인가? - ‘공동행동’의 필요와 당위와 역사성

고민택



맑스코뮤날레 2차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는 필자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이하 노혁추)은 〈혁명〉 창간호를 통해 노혁추가 현 시점에서 왜 “가칭) 노동자 독자 정당 건설 공동행동”(이하 제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는지 이미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 또한 맑스코뮤날레 2차 포럼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통해서도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

더 길게는 이번 제안은 노혁추 결성에서부터, 특히 총선방침을 제출한 시기부터 밝혀왔던 일련의 정세인식과 그에 따른 정치활동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즉 이번 제안은 객관적으로는 ‘통진당 사태’에 대해 노동자계급이 취해야 할 올바른 정치방침 또는 구체적 전술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혁추 내적으로는 조직을 결성하면서 스스로 상정한 ‘당 건설 추진체’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맥락과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번 제안을 처음 접한 동지들은 물론이고 좀 더 폭넓은 이해를 원하는 동지들은 수고스럽더라도 노혁추 블로그(<http://blog.jinbo.net/wrp>)에 접속하여 〈여기에〉란에 올려놓은 글들을 함께 읽어 보기를 당부한다. 그래야만 이번 제안에서 노혁추가 말하고자 하는 정치적 맥락과 의미하는 바

가 무엇인가를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제안에 대한 동의여부는 그런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문제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는 지금의 제안이 과연 노혁추 결성 초동 주체들이 ‘사노위 정치적 해산 선언’을 주장하고 노혁추를 결성하면서 밝힌 당 건설 노선과 일치하는가, 올바르게 타당한 정세 분석에 기초하고 있는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등에 대한 의문 내지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성적 판단을 하기에 앞서 정서적으로 선뜻 내켜하지 않는 반응도 나올 수 있다. 또한 심정도 심정이지만 현장은 현실적으로 그 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 이미 정파적 판단과 분립이 고착되어 있으며 동시에 설령 어떤 형태, 어떤 수준에서든 공동전선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역사적으로 공동전선에 대한 운동 경험과 축적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번 제안이 혁명세력/사회주의세력이 그동안 주장해 온 ‘정치적/혁명적 순수성’ 또는 ‘정치적/혁명적 원칙과 기초’만 의심받게 되고, 의도와 무관하게, 결국 또 다른 의회/개량주의(사민주의) 정당을 강화, 정당화시키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이번 제안이 아무리 대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정세적으로도 절실하기 때문에 객관적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이 공동전선을 성립시키고 주도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와 최소한의 정치력을 담보하고 있는 정파가 뚜렷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공동전선 자체가 아예 성립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적 냉소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덧붙여 이와 같은 정황에 대한 판단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 독자 정당 창당’과 ‘혁명정당/사회주의정당 건설’ 문제를 별개의 사안/개념으로 보거나 적어도 단계적으로 접근/사고하면서 지금 노동자계급이 마주하고 있는 일반적 과제는 전 세계 차원에서 ‘새로운 노동자당 건설’ 또는 ‘노동자 독자 정당 창당’이 아니라 ‘혁명정당/사회주의정당 건설’이라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그 무엇보다 지금은 각자 의도나 생존전략을 관철하기 위해 서라도 그 이전에 전체 노동자계급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즉 “자본가 정당과 단절! 야권연대 반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복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한 속에서 각자 의도나 생존전략만을 앞세운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자멸 내지 고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

반대로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또는 ‘진보좌파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조직이나 활동가들의 입장에서는 혁명 또는 사회주의를 말하는 세력과 서로 어차피 같이 할 생각도, 가능성도 없다는 판단 아래 역시 제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거나 부정적으로 바라 볼 수 있다. 또한 그게 아니라도 매우 현실적으로 혁명세력/사회주의 세력이 소수라는 점을 이유로 그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노동자 독자 정당’의 정체성을 아예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내지 ‘진보좌파정당’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가‘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할 수 있다.

또한 민주노조운동에 기반하고 있는 활동가층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어떤 당이든 간에 지금 과연 ‘노동자 독자 정당 창당’을 말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대중적 동력과 기반이 있는가, 이제까지의 역사적 경과와 경험으로 볼 때 정파들에게 당 건설을 추동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당 문제보다는 투쟁조직화나 대선 대응이 더 시급한 문제 아닌가?(우리의 제안은 이 문제를 중요하게 포함하고 있지만) 등의 질문이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렇다고 할 때 ‘제안서’만으로는 제안이 갖는 정치적 맥락과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제안이 갖는 정치적 맥락과 의미에 대해 좀 더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자 하는 노력과 시도이다. 그러나 손바닥도 부딪쳐야 소리가 나듯이 우리가 우리 바깥의 생각을 모두 담을 수는 없다. 소통과 논쟁이 필요하다. 그 속에서 우리도 미처 보지 못했거나 깨닫지 못한 새로운 문제제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한다.

다만 한 가지 말해두고자 하는 것은 제안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출발지점을 제시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출구, 즉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 물론 우리로서는 우리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다. 공동전선을 함께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당연히 그래야 하며 그럴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더라도 이는 동상이몽이나 오월동주와는 다르다.

그 무엇보다 지금은 각자 의도나 생존전략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그 이전에 전체 노동자계급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즉 “자본가 정당과 단절! 야권연대 반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복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한 속에서 각자 의도나 생존전략만을 앞세운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자멸 내지 고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한 태도는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무능/편협/오만한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대중이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가로막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다. 이것이 현재 엄존하는 객관적/대중적 압력이다.

물론 대중들이 아직은 이를 직접 요구하거나 행동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은 대중의 책임도 의무도 아니다. 대중이 직접 그런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객관적/대중적 압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파나 활동가라면 당연히 스스로 인지하고 느껴야만 하는 압력이다. 대중을 핑계 삼아 이를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꿈무늬주의 내지 대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

다음으로 제안이 특정 개별 사안(현안)에 대한 공동전선을 넘어 당 건설을 위한 공동전선임을 말하고 있는

대중들에게 정치력을 시험받고 검증받는 중요한 정치적 과정이다.ダイナ믹하고 드라마틱한 과정들이 펼쳐질 것이며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 우여곡절, 좌충우돌이 있겠지만 이를 풀어나가는 것 역시 대중적 차원에서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고 지도력을 검증받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데 이것이 가능한 설정/전술인가. 이점은 차치하더라도 이를 통해 단일한 정치적 결론을 낸다는 것은 객관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 분명한데 결과적으로 대중에게 정치적 무책임을 드러내고 더 큰 실망을 안겨 주게 되지 않겠는가. 공동전선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출발부터 매 사안마다 부딪쳐야 하는 숱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정치력이 존재하는가?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 공동전선의 기승전결이 도대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가 머리 속에서 그려지지 않을 수 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누구도 여기에 대한 답을 미리 갖고 있을 수 없다. 지금은 오직 원리와 원칙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구체적 과정은 참여자 사이에서의 논의와 논쟁을 통해서만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다. 이 또한 대중들에게 정치력을 시험받고 검증받는 중요한 정치적 과정이다. 다이내믹하고 드라마틱한 과정들이 펼쳐질 것이며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 우여곡절, 좌충우돌이 있겠지만 이를 풀어나가는 것 역시 대중적 차원에서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고 지도력을 검증받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필요조건

‘당 건설을 위한 공동전선’이 형성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필요조건일 뿐이다. 그러나 필요조건을 건너뛰고, 즉 각개약진 방식으로 성공할 길이 없다. 지금으로서는 ‘당 건설을 위한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일차적 관건이다.

지금 정세는 큰 틀에서는(객관적으로는), 즉 노동자계급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통진당 사태’로 인해 최종 파산에 이른 노동자정치세력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노동자당’을 건설할 필요성이 대중적 차원에서까지 전면적으로 등장한 상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그러한 정세 속에서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놓여 있다.

하나는 경로, 즉 전술 문제다. 여기서의 핵심은 통진당 및 야권연대(민주대연합)를 노동자계급과 철저히 분리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선을 대중적으로 힘 있게 형성할 때만이 비로소 ‘새로운 노동자당 건설’ 문제가 현실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지 못하면 주어진 계속해서 통진당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통진당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노동자계급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문제가 훨씬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니 ‘통진당 사태’가 벌



어졌음에도 분리시키지 못하면 그 때도 마찬가지다.

혁명세력/사회주의세력의 일차적 과제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혁명세력/사회주의세력만의 힘으로 그를 현실화하기 어렵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당 건설을 위한 공동전선'이 형성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필요조건일 뿐이다. 그러나 필요조건을 건너뛰고는, 즉 각개약진 방식으로서는 성공할 길이 없다. 지금으로서는 '당 건설을 위한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일차적 관건이다.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곧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당을 건설할 것인가의 문제다. 여기서의(새로운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공동전선 안에서의) 핵심 쟁점은 또 다른 의회/개량주의 정당인가, 혁명/사

회주의정당인가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이 바로 지난 민주노동당 창당 시절, 그 뒤의 민주노동당 분당 시기, '진보대연합/민주대연합'이 주되게 거론됐던 당시에 비해 객관적, 결정적으로 달라진 지형이다. 대중적 공간에서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혁명/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주장할 수 있는, 대중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정세가 객관적으로 도래한 것이다.

물론 결과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 그것이 또 다른 의회/개량주의 정당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지 혁명/사회주의세력의 대중적 진출을 여는 계기로 작용할지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해두고자 하는 것은 숙명론(패배주의)적 태도를 먼저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나쁜 경우라도 그것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대중적, 정치적 의의를 획득할 수 있으며 남길 수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여기서의(새로운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공동전선 안에서의) 핵심 쟁점은 또 다른 의회/개량주의 정당인가, 혁명/사회주의 정당인가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이 바로 지난 민주노동당 창당 시절, 그 뒤의 민주노동당 분당 시기, '진보대연합/민주대연합'이 주되게 거론됐던 당시에 비해 객관적, 결정적으로 달라진 지형이다. 대중적 공간에서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혁명/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주장할 수 있는, 대중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정세가 객관적으로 도래한 것이다.

공동전선 전술을 제안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그 공동전선 속에서 또는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사회주의정당 건설 투쟁을 대중적으로 펼치기 위함이다. 우리로서는 최종(결과)적으로 공동전선 전체가 또는 공동전선의 보다 큰 부분이 혁명/사회주의정당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강조해서 말하지만 '당 건설을 위한 공동전선 전술'은 노혁추의 당 건설 노선의 변경(폐기)은커녕 그것의 구체화/현실화이다. 즉 '추상에서 구체로의 상승'이다. 우리의 전술은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노혁추의 입장에서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냥 한 번 해보자는 차원이나 임기응변이 아니다.

노혁추의 당 건설은 노동자혁명당을 건설하는 노선이다. 혁명적 강령의 기초 위에서 당을 건설하는 노선이다. 노동자운동의 현 개량주의 지도력에 맞서 혁명적 지도력을 세우는 것을 통해 당을 건설하는 노선이다. 그 때문에 정세 대응에서 기권하지 않고 전국전선을 수립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서 계급투쟁 지도력을 세우고자 투쟁하는 당 건설 노선이다.

정세와 무관하게 중장기적으로 우리 조직의 외연을 확장하여 당 건설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전국전선보다는 내 영역에서 쪽수를 늘리고 토대를 차분히 구축해서 당을 건설하겠다는 식의 대기주의·종파주의에 반대하는 당 건설 노선이다.

이유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동전선이 성립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무엇보다 노혁추 단독으로는 공동전선을 이끌어 낼 만큼의 정치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이것이 곧 공동전선을 제안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제안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

첫째, 제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도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결국 전체 노동자계급이 당면한 과제를 중심으로 전술을 사고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조건을 우선시 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건 바로 '당 건설 추진체'를 자임했던 애초의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다. 노혁추를 하나의 씨클로 후퇴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가능성이 낮다는 것과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과는 분명 다르다. 지금

은 여전히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새로운 정치력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 아니 끝내 누구도 절대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지리멸렬함으로써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다시 부활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반대로 말하면 누구에게나 아직 기회는 열려 있다. 즉 세력은 대단히 상대적인 개념이다. 지금 누구도 자신의 세력만으로 전체를 주도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은 없다.

셋째, 지금 정세는 역동적/유동적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루하루 급변하고 있다. 지배계급조차도 자고나면 입장과 태도가 달라질 만큼 예측 불허의 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혁명세력이 개입할 정치적 공간은 넓혀 있다. 교과서적 추상이 아니라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현안을 매개로 혁명적 원칙과 전술을 제시할 수 있는 쟁점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통진당만이 아니라 그 바깥의 의회/개량주의 세력의 취약성과 무능함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그들로서도 어떠한 응답을(하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쟁점을 이어갈 수 있다.

넷째, 설령 우리의 제안이 어려움에 부딪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안이 틀려서가 아니라, 즉 대의에 입각하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파적 속사정이 달라서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적어도 대의를 거스르지 않고자 하는 세력이라면, 더 정확하게는 객관적으로 대의를 앞서 제출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세력이라면 누가 제안을 했든 간에 관계 없이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그 속에서 얼마든지 스스로 판을 열 수도 있다. 노혁추의 입

장에서는 본래의 취지만 달라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럼에도 공동전선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을 수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공동전선이 결국 의회/개량주의(사민주의)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판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 먼저 이에 대해 말하기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공동전선 전술을 제안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그 공동전선 속에서 또는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사회주의정당 건설 투쟁을 대중적으로 펼치기 위함이다. 우리로서는 최종(결과)적으로 공동전선 전체가 또는 공동전선의 보다 큰 부분이 혁명/사회주의정당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미리부터 불가능하다거나 어렵다고 스스로 선을 그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앞서 말했듯이 이 공동전선은 의회/개량주의(사민주의) 정당과 혁명/사회주의정당 사이의 정치투쟁의 장(공간)이 될 것이란 것만은 분명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 공동전선의 성격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이 공동전선이야말로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노동자계급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유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노동자 독자 정당 창당’ 과제와 ‘혁명/사회주의정당’ 건설 문제가 각각 병렬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 어쨌든 이 공동전선이 성립된다면 그것은 바로 전

자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공동전선은 계급협조 야권연대에 대한 반대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인정하는 이외의 그 어떤 전제조건도 필요치 않으며 달아서도 안 된다.

이 공동전선은 바로 의회/개량주의 세력에게 비판적인 노동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치공간을 제공하고 이 속에서 주체로 세우기 위한 운동이나 다름 없다.

그럼에도 이 공동전선이 혁명/사회주의 조직 사이의 공동전선이 아니라 의회/개량주의 세력과 함께하는 공동전선이라는 점 외에도 또 다른 현실로 혁명/사회주의 세력이 이 공동전선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지금의 단면만 놓고 보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연동하여 의회/개량주의 세력에 비판적인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현장활동가’들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부정하기 어렵다.

물론 혁명/사회주의 조직이나 ‘현장활동가’들의 이러한 태도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러하다는 것은 일단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바로 이 현실을 바꾸지 않고는 혁명/사회주의 세력은 사실상 자신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할 수 없다. 혁명/사회주의 세력마저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활동에 나서지 않고 굴복한다면 결코 의회/개량주의 세력으로부터 지도력을 빼앗아 올 수 없다. 이것이 백배 천 배나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사실/현실이다. 즉 이 공동전선은 바로 의회/개량주의 세력에게 비판적인 노동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치 공간을 제공하고 이 속에서 주체로 세우기 위한 운동이나 다름없다.

역사성

이제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제기해 보자. 지금의 현실은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과 같은 상태/결과에 도달한 것이 결코 아니다. 지금의 현실은 지난 운동의 역사적/필연적 산물/결과이다. 단지 한국만의 상황도 아니다. 세계적인 현상이다.

불세비키 운동 이후로 혁명세력은 계속해서 실패해 왔다. 러시아 혁명과 코민테른 운동 이후로 혁명적 운동의 전통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크게 보아 그

후의 운동은 사민주의(개량주의 정당/ 부르주아 노동자 정당)의 득세, 스탈린주의 인민전선(자본가정당과의 연합으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전망 제거)의 잔존, 혁명/사회주의 세력이 보인 소정파(씨클), 중파, 대기주의(노동자계급에 대한 지도력 상실)로의 전략에 의해 얼룩졌다. 아직도 이 현실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온전한 의미의 혁명세력이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조차 없다. 최고로 잘 나갈 때조차 현장조직의 ‘배후 세력’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출범 이후에는 굴욕적이게도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의 투쟁부대 역할을 넘어서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사회주의 정파는 계속해서 후퇴를 거듭했으며 현재는 지리멸렬 한 채로 생존하기에도 허덕이고 있다. 2천년대 중반 이후에나 그나마 ‘사회주의’를 말하기 시작했으며, 당 건설, 강령 건설도 최근에 서야 시작한 단계일 뿐이다.

혁명/사회주의 세력이 노동자계급을 정치적으로 조직하지 못한 결과다. 그 책임의 거의 대부분은 혁명/사회주의 세력 자신에게 있다. 대중투쟁이 미약했던 탓이 아니다. 대중들의 투쟁은 늘 있어왔다. 혁명/사회주의 세력이 대중에게 빚졌으면 빚졌지 대중은 혁명/사회주의 세력을 볼 기회조차 제대로 대면한 적이 별로 없다.

혁명/사회주의 세력은 대중적 차원에서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즉 개량주의 지도부와의 전면적인 정치투쟁

혁명/사회주의 세력은 대중적 차원에서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즉 개량주의 지도부와의 전면적인 정치투쟁을 펼치지 못했다. 그들 지도부와의 지도력 다툼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지도력 다툼 자체를 대중적 공간에서 벌이지 못했다. 그와 같은 개념 자체가 없었다. 단지 ‘추상적/원칙적 비판’에 머물렀을 뿐이다.

을 펼치지 못했다. 그들 지도부와의 지도력 다툼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지도력 다툼 자체를 대중적 공간에서 벌이지 못했다. 그와 같은 개념 자체가 없었다. 단지 ‘추상적/원칙적 비판’에 머물렀을 뿐이다. 따라서 과거는 물론 현재도 혁명/사회주의 세력은 대중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혁명/사회주의 세력은 대중을 향한 전국적 차원의 직접정치를 제대로 시도한 바가 없다. 결과적으로 의회/개량주의 세력에 대당할 수 있는 대안 세력(지도력)으로서의 혁명/사회주의 세력은 대중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부끄럽지만 ‘골방 좌파’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에 혁명/사회주의 세력은 당 건설과 강령 건설의 문제를 계속해서 지연, 유보시켜왔다. 개량주의 지도부와의

전면적인 정치투쟁이나 전국적 차원에서의 대중을 향한 직접정치를 하지 않는데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때문이며 대중의 압력을 받지도 않은 때문이다.

혁명/사회주의 세력은 당면 시공간을 구체적 물질운동이 형성되고 펼쳐지는, 따라서 대중의 의식과 행동에 매일매일时时刻刻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계급투쟁의 장으로 대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대해왔다. 너무 먼 과거의 역사만을 말하거나 반대로 너무 먼 미래만을 말할 뿐이었다. 사회주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다.

당면 정세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입하기

그럼에도 주저한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자신이 정치투쟁을 벌일 준비와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둘째는 대중의 변화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는 것이다. 대중을 고정된 상태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혁명을 말할 수 있는가? 위기가 혁명을 저절로 가져다주지 않는다. 혁명이 단지 의식의 산물일 수 없지만 의식적 개입 없이는 혁명은 성공할 수 없다. 혁명적 지도력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기다린다고 주어지지 않는다. 오직 정치투쟁의 결과로써만 쟁취할 수 있다.

위해서는 ‘전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서의 전술이란 전략의 하위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개별 투쟁에 대한 즉자적인 대응 방안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의 전술이란 무엇보다 ‘전국적인 정치전술’을 일컫는 것이다. ‘강령/전술/조직’의 통일 차원에서의 전술을 말하는 것이다. 이 차원의 전술이야말로 노동자계급 정치의 핵심 요체다. 노동자계급을 이러한 전술을 통해 단련하고 훈련/축적시키지 않으면, 혁명/사회주의 세력 스스로 그를 통해 대중적으로 검증받지 못하면 노동자계급 정치, 혁명정치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얘기를 이어가 보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동전선에 대해 위와 같은 우려가 나오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지난 운동이 낳은 유산이며 아직 그 유산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고리를 끊지 않고는 혁명운동은 진전은 고사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 제라도 혁명/사회주의 세력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 혁명/사회주의 세력이 존재해야 할 이유도, 임무와 역할도 거기에 있다. 이것은 강령을 건설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아니 당과 강령을 건설하는데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불가결한 경로다.

공동전선이 목적하는 바의 대의와 그 필요성(중요성)을 먼저 사고하지 않고 왜 ‘정치공학적’, ‘중파적’ 사고를 앞세우는가? 두 가지만 말하겠다. 하나는 공동전선이 의회/개량주의 정당을 강화시켜 줄 가능성보다는 공동전선을 하지 않았을 경우가 오히려 더 의회/개량주의 정당을 강화시켜 줄 가능성이 더 높다. 공동전선을 하든, 하지 않든 의회/개량주의 정당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되게 되어 있다. 이들을 공동전선으로 불러들여 그 속에서 정치투쟁을 벌이지 못한다면 그들은 오히려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노동자계급을 또 다시 맘껏 휘두를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스스로의 정치적 긴장도, 대중으로부터의 정치적 강제도 훨씬 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준비와 태세’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주저한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자신이 정치투쟁을 벌일 준비와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둘째는 대중의

변화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는 것이다. 대중을 고정된 상태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혁명을 말할 수 있는가? 위기가 혁명을 저절로 가져다주지 않는다. 혁명이 단지 의식의 산물일 수 없지만 의식적 개입 없이는 혁명은 성공할 수 없다. 혁명적 지도력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기다린다고 주어지지 않는다. 오직 정치 투쟁의 결과로써만 쟁취할 수 있다.

혁명/사회주의 세력이라면 조합/현장 활동가들의 뒷꿈무늬를 추수하며 아무 정치적 책임도 따르지 않는 배

후정치로 도망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모처럼 새롭게 일고 있는 조합/현장 활동가들의 움직임을 정치적으로 상승/진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왜곡/후퇴시키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현 시기 노동자계급의 당 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조직이라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책임 있게 자신의 계획과 전술을 계급 앞에 제출하고 검증하는 실천을 조직해야 한다. **혁명**



혁명의 광고

정세월간지 **혁명**과 함께하는

정세토론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은 정세월간지(혁명)과 함께 하는 정세토론을 매월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구독자 분들께서 원하시는 지역의 경우 요청에 따라 해당지역에서도 정세토론회의 개최가 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매월 지역별로 진행되는 정세토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지들의 깊은 관심과 폭넓은 참여 바랍니다.

블로그 : blog.jinbo.net

이메일 : wrp@jinbo.net

전화번호 : 02)6348-8318

팩스번호 : 02)6944-8308

노혁추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자료]

공동전선의 원리와 적용

1. 공동전선의 원리

1.1 공동전선은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에서, 그리고 제국주의와 각종 반동에 맞선 투쟁에서 혁명 전위와 여타 피착취·피억압자 조직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련의 전술 원리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원리들이 적용되는 영역은 다양한데 크게 볼 때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노동자 공동전선으로서 부르주아지에 맞선 구체적 투쟁에서 계급의 통일단결과 계급적 독립을 이루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하나는 반동에 맞선, 특히 현 시대에 제국주의에 맞선 비(非) 프롤레타리아 피억압계급들과의 동맹 또는 블록이다. 공동전선은 공동의 직접적 목표나 통합조정된 전술에 대한 협정을 맺지 않은 채 우연히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행동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공동전선은 원래 군사 용어인데, 서로의 군대를 하나로 섞지 않고 또는 깃발을 서로 혼동되게 함이 없이 특정의 제한된 과제를 두고 공동의 적

을 패배시키기 위해 투쟁 전선들을 결합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1.2 혁명정당의 전략적 목표는 공산주의 사회의 수립이다. 이를 이루어낼 유일한 방법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서이다. 즉 노동자평의회(소비에트)와 노동자 민병대에 의한 국가권력의 장악을 통해서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혁명정당이 절대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당만이 부르주아지로부터의 완전한 계급적 독립을 구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혁명적 중핵을 가장 광범위한 피착취 대중의 신뢰를 획득한 대중정당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대다수는 비(非)혁명적, 심지어 반(反)혁명적 조직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조직의 본질을 폭로하는 것이 혁명가들의 임무이다.

1.3 선전만으로는 이 임무를 수행하기에 불충분하

다. 개량주의 조직 또는 중도주의 조직이 노동자의 이해를 위해 싸우거나 제대로 방어해낼 수 없다는 것을 실천 속에서 입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혁명정당은 일련의 전술을 배치 운용하여 혁명정당이 유일하게 일관된 노동자계급 정당임을 계급투쟁 자체에서 대중에게 입증해 보여야 한다. 동시에 혁명정당은 대안 지도부로서 자신의 면모와 능력을 입증시킬 방법, 실제 대중투쟁을 이끄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혁명정당은 독자적인 주도력을 보여주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 조직역량을 여타 노동계급 대중조직들과 충실히 결합 조정시킬 수 있는 능력 또한 보여주어야 한다.

1.4 공동전선은 계급투쟁에서 하나의 전술로서, 피착취·피억압 대중들의 단결투쟁을 그들 간의 정치적 차이·분화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가장 폭넓게 만들어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단결의 목적은 자본가들과 자본가 정부의 공격을 격퇴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과 그 동맹세력이 자본주의 타도라는 목표를 보다 앞당길 수 있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조건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그러한 단결의 목적이다. 이런 점에서 공동전선은 일차적으로 계급투쟁의 필요로 인해 제기된다. 바로 이 때문에 혁명가들은 계급의 적에 대해 공동행동이 호소, 촉구될 때 단순히 거기에 반응하는 것을 넘어 언제나 스스로 앞장서서 그러한 공동행동을 촉구하고 제안해야 한다.

1.5 올바른 공동전선 정책을 펴면 노동자계급 내부의 개량주의, 무정부주의, 전투적 노조 만능주의(생디칼리즘), 중도주의(중양주의), 그리고 각종 부르주아

소부르주아 이데올로기와 강령들의 한계를 폭로할 수 있다.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동요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일체의 지도부를 혁명적 사회주의 지도부로 대체할 수 있다. 매 단계에서 공동전선은 혁명조직으로 노동자들의 충원을 더욱 늘어나게 해 주고, 혁명조직이 대중조직에 더욱 더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1.6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하여 공동전선 전술은 독립적인 혁명조직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 혁명조직은 국가권력 장악과 자본주의 타도를 위한 이행강령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혁명조직은 공동전선에 스스로를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대오로 참가해야 한다. 다른 한편, 광범위한 비(非)혁명적 대중 — 미조직 대중과 타 정치세력에 의해 조직된 대중 모두 — 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동전선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공동전선의 필요는 그러한 광범위한 비혁명적 대중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1.7 그 때문에 공동전선의 핵심 초점은 어떻게 혁명정당과 노동자계급 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낼 것인가에 있다. 혁명정당과 노동자계급 간의 이 관계라는 것이 상시적이면서도 변화하는 것이므로, 그리고 공동전선이 펼쳐지는 영역 — 즉 계급투쟁 — 도 마찬가지로 상시적이므로 공동전선은 정확히 말하면 어디서나 필요하고 도처에서 제기되는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런 또는 저런 형태로, 이런 무대 또는 저런 무대에서 반복적으로 배치 운용되는 보편적인 전술인 것이다.

1.8 공동전선은 권력 장악에 이르기까지 줄곧 한 파

트너와 행동을 계속 같이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공동전선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러한 반복된 사용이 프롤레타리아 전위정당의 총괄적인 전략 체계 내에서 작동하는 일련의 전술이지, 그 범위를 넘어설 순 없다. 이 전략에는 반드시 전위정당의 독자적 행동이 포함된다. 공동전선은 폭넓게 다양한 형태로 전개할 수 있는데, 그런 만큼 끊임없이 체결됐다가 파기되곤 한다. 공동전선을 위해 노동자계급 전위가 자신의 요구강령을 대중조직의 각종 비혁명적 지도부가 받아들일 만한 수준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는 혁명강령 자체를 수동적 선전의 영역으로 떨어뜨리고, 선동을 당면요구 수준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1.9 공동전선은 차별화된 통일이다. 공동전선은 엄밀히 제한되고 미리 규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는 공동행동이다. 공동전선은 또한 공동전선 파트너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동반한다. 공동행동 없이는 자본가계급의 공격을 분쇄하거나 새로운 성과물을 쟁취할 수 없고, 한편 파트너에 대한 비판 없이는 쟁취한 성과를 유지할 수도 혁명을 전진시킬 수도 없다. 공동전선 전술을 적용하는 데서 범하는 오류는 모두 이 차별화된 통일을 포기하고 혁명조직의 임무와 계급의 임무를 형식적으로 동일시할 때 일어난다.

1.10 초좌익주의의 오류는 혁명 강령을 한결같이 공동전선 요구안과 대립시키는 데서 비롯한다. 초좌익은 개량주의/중도주의 지도부가 공동전선을 거부할 수밖에 없게 최후통첩을 던지고는 그들을 폭로할 수 있다는 헛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현실에서 그러한 ‘폭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량주의 지도자들이 폭로되는 것은 이들이 혁명적 전술 또는 전략을 실행에 옮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중의 당면한 이해를 위해 투쟁할 능력과 의지가 없어서이다. 종파주의자는 자신이 기회주의적 유혹에 굴복할까봐 두려워 실제 계급투쟁의 지형위에서 평가받기를 회피한다.

1.11 다른 한편, 기회주의자는 투쟁강령을 출발점으로 삼길 기피한다. 심지어는 계급투쟁의 객관적 필요가 제기하는 단일 요구조차도 회피하려 한다. 이른바 현재 대중의 의식에서, 더 나쁘게는 대중조직 지도부들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에서 시작하려 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공동전선을 위해 혁명가들이 제출하는 제안의 범위는 ‘완전한 강령’은 아니겠지만 개량주의 지도부들의 소심한 제안은 물론이고 대중의 일반적 의식보다도 상당히 앞설 것이다. 공동전선의 목적은 대중(특히 그 선진 부위)의 현재 의식을 해당 시기의 긴급한 과제(적들이 가하는 공격의 성격에서 제기되는 바의 과제)에 연결시켜 주는 것이어야 한다.

1.12 공동전선은 전략이 아니다. 현재의 투쟁에서 권력 장악까지 망라하는 공동전선 강령 같은 것은 없다. 혁명 조직은 해당 공동전선에 걸맞게 혁명 강령 중 특정 부분을 골라 제출한다. 실제 투쟁에서 더 광범위한 세력을 결집하는 데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그러한 부분을 제출한다. 공격의 성격과 계급 역관계에 대한 판단을 내린 뒤에 혁명조직이 제출하는 구체적인 슬로건과 요구는 투쟁 속의 단결을 이끌어내 적의 공격을 격퇴시키고 새로운 전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요구

는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한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 일체의 작위적인 요구나 이데올로기적 걸치레를 피해야 한다.

1.13 공동전선에서 내걸 투쟁요구들의 성격은 도식적으로 범주화할 수 없다. 구체적인 공동전선 제안이라면 당연히 오직 한 유형의 요구 — 예를 들어 당면한 경제적 요구, 민주적 요구, 이행적 요구 — 로만 성립할 수 있다. 특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결합된 행동을 목표로 하는 몇 가지 요구안을 가지고 공동전선을 제기하고 체결할 수 있다. 심지어 단일 요구를 가지고 체결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동전선은 파업이나 무장행동 같은 단일 행동일 수도 있고, 그보다 길게 지속되는 행동 캠페인일 수도 있다. 공동전선 제안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요구를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즉 개량주의 지도부가 그 요구를 거부할 경우 그 영향 하에 있는 대중을 전취하고 그 지도부를 폭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 요구가 공동전선 제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전선 요구안에 혁명적 요구들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비혁명적 정세에서, 예를 들어 소비에트 같은 요구를 공동전선 요구안에 집어넣는다면 그것은 수동적 선전주의와 종파주의의 표시일 따름이다. 반면, 계급투쟁이 대대적으로 솟구치는 조건에서는 공동전선의 최고 표현인 소비에트 유형의 투쟁기관 건설이 필수불가결한 요구가 된다.

1.14 요구들은 반드시 명료하고 정확한 투쟁방법(예를 들어 시위, 파업, 정방대 등) 및 조직형태(예를 들어

파업위원회, 소비에트 등)와 함께 제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전선은 그 공동전선이 대항하고자 하는 적의 공격의 성격에 따라 형태와 지속 시기가 다양할 수 있다. 일련의 다양한 또는 반복되는 행동을 통합 조정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 같은 조직들도 공동전선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공동전선은 행동 그 자체(예를 들어 시위)를 넘어, 행동의 준비와 사후 평가까지 포함한다.

1.15 공동전선은 요구를 공유하고, 공동전선 파트너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포기함이 없이 규율 있게 그 요구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다. 공동전선은 그 공동투쟁의 목표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라면 그 누구와도(‘악마와도’) 체결할 수 있다. 원칙 있는 공동전선인지 아닌지는 블록 파트너의 신뢰성 여부가 아니라 목표와 투쟁방법이 원칙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혁명가들이 적진의 분열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개량주의자들을 그들 자신의 강령과 충돌하도록 몰아갈 수 있다면, 이것은 원칙 있는 공동전선이다.

1.16 공동전선에서 인정되는 ‘비판의 자유’에는 블록 파트너가 공동전선의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서 보이는 동요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들의 정치적 태만과 협정 불이행에 대한 비판도 포함한다. 따라서 혁명과 개량주의 사이의 중요한, 결국엔 결정적이기까지 한 차이들을 제쳐두면서까지 하는 공동의 선전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공동전선과 관련된 공동 출판물(예를 들어 파업위원회 회보, 시위를 조직하기 위한 전단 등)은 오직

공동전선의 요구와 목표를 선전·선동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공동행동과 비판 사이의 관계는 미리 정해진 공식 같은 것은 없다. 공동행동 전이든 그 진행 중에든 종료 뒤든 파트너를 비판할 권리를 한 순간도 놓지 않는다. 이러한 권리를 언제, 어떤 형태로 행사할 지는 주어진 상황에 따른 구체적 판단에 달려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비판의 수행은 의무이다.

1.17 공동전선은 대중(평당원, 평조합원)과 지도부 모두에게 제기해야 한다. ‘오직 아래로부터의 공동전선’이라는 사상은 자멸적이고 초좌익적인 함정이다. 이런 직접적이고 일방적인 호소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지도부를 쉽게 포기할 수 있다면, 애초에 공동전선 같은 것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도부를 향해 공동전선 호소를 하는 목적은 이들을 행동에 나서게 하여, 대중에게 연설조의 폭로가 아니라 이들 지도부의 행동에 대한 대중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이들 지도부의 한계가 치명적인 것임을 입증시켜 보이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공동전선은 개량주의 지도부들과 정식으로 협정을 맺기보다는 제안 단계에 머물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공동전선이 개량주의 조직에 속한 평회원들을 상대로 한 선동과 대중적인 선전 캠페인 수준에 머문다.

1.18 급진화된 노동자들을 개량주의 지도부로부터 떼어내는 데 일부 성공을 거둔 경우에도 공동전선은 아직 뒤에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게 그 완전한 효력과 힘을 잃지 않는다. 개량주의 지도부가 혁명가들과 공동으로 행동하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아래로부터의 공동전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때는 그 지도부에 대한 규탄과 평

회원들을 향한 행동 제안을 결합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그 지도부에 대해 행동에 나서도록 압박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것이 성공하면 훨씬 더 많은 층을 행동으로 끌어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1.19 공동전선을 깨는 것은 공동전선을 결성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 공동전선이 그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목표가 달성될 경우(또는 실패로 결론 날 경우) 해산하거나 재설정되어야 하며 참가한 세력들 사이에서 평가를 조직하고 교훈을 끌어내야 한다. 공동전선이 단지 외교적 또는 문필적 의례로만 유지되어 파트너들이 행동할 의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또는 파트너들이 약속을 이행치 않거나 계급의 적과 타협하는 방식으로 공동전선의 목표를 사보타지 내지는 훼손하는 경우, 파트너들이 진지하게 공동전선을 다른 대중적 세력들에게 확장하는 것을 거부하고 종파 수준의 규모로 공동전선을 제한하는 경우, 이 모든 경우에선 공동전선의 파기가 불가피해진다. 그렇더라도 가능한 한 평조합원 지도부와는 공동투쟁을 지속하여 공동전선 자체의 독자적인 지도력을 세우고 비(非)혁명적 조직으로부터 건 강한 평회원들을 공동전선 대오로 획득해야 한다.

1.20 지금까지 기술한 사항들은 원칙 있는 공동전선이라면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공동전선이 끝까지 원칙을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될 것임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오직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만이 공동전선 제안의 올바른 기초가 될 수 있다. 어떤 공동전선 요구들이 허용될 수 있고 필요한지, 또 어떤 세력에게 이런 요구들을 제안해야 하는

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년간 계급투쟁에 개입하면서 축적한 지도력과 경험이 필수적이다.

2. 노동자 공동전선

2.1 노동자 공동전선의 목표는 자본가계급에 맞서 노동자계급이 최대한의 행동 통일을 이루도록 하는 데 있다. 계급적 독립의 관철이 노동자 공동전선의 핵심이다. 그 지도적 원리는 혁명 조직이 대중적인 노동자 조직의 개량주의 · 중도주의 지도부들에게 ‘자본가계급과 단절하라!’며 계급적 과제를 제기하고 도전장을 던지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단결은 자본가계급 및 자본가 국가, 자본가 정당과의 분립을 의미한다. 노동자 공동전선의 원리는 위에서 언급한 원리를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 — 방어적인 것이든 공세적인 것이든 — 에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 공동전선의 원리는 가장 제한적이고 방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전체 부르주아 질서를 겨냥한 공세적인 행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노동자 공동전선은 개량주의 · 중도주의 지도부들에 대한 도전을 포함한다. 준(準)혁명적 · 혁명적 상황에서 그러한 도전은 이들 지도부들에게 ‘자본가계급과 단절하라! 노동자정부를 위한 투쟁에 나서라!’라는 계급적 과제를 제기하는 도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

2.2 노동자 공동전선 원리는 노동조합에서 광범하게 적용된다. 정말이지 노동조합은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에서 ‘공동전선’이다. 자본주의 내에서 그리고 자본주

의에 맞서서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공동전선이다. 노동조합은 그 본성상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한 임금노동자 층을 포괄해야 하는 공동전선이므로 혁명가들은 노동조합에 당의 꼬리표를 붙이거나 노동조합을 당 지도부에게 기계적으로 종속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노동조합은 조직적으로 자주적인 기구이어야 하며, 또 그렇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만 노동조합이 상대적으로 덜 계급의식적인 노동자들에게도 ‘사회주의의 학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원칙 있는 태도는 노동조합을 비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묶어 두려는 시도와 어떤 공통점도 없다. 혁명 정당은 공공연하고 정직하게 지도력을 건 투쟁을 전개하고 이 속에서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는다.

2.3 혁명적 중핵은 노동조합에서 지도력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의 도상에서, 혁명적이진 않지만 전투적이고 민주적인 세력들과 한시적 동맹, 즉 공동전선을 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공동전선의 과제는 노동조합을 계급투쟁에 복무시키고 노조관료에 대한 평조합원의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관료층 자체를 없애는 데 있다. 이러한 공동전선은 중요한 정세적 전투와 관련된, 일회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또한 노동조합의 민주화와 더 전투적인, 나아가 혁명적인 전술의 승리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캠페인을 만들어나갈 필요도 있다. 이러한 평조합원운동을 위해서 요구안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미리 확정할 수 없다. 모든 상황에 두루 맞는 고정된 요구안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다.

2.4 노동조합에서 혁명정당은 자신의 강령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즉 (공장평의회, 소비에트, 노동자 민병대와 더불어) 노동조합을 혁명의 도구로 재편하는 투쟁을 펼쳐야 한다. 그러나 평조합원운동은 공동전선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혁명정당이 평조합원운동을 발의, 주도하는 경우에도 그 운동의 구체적 행동강령이 어떠해야할지는 계급투쟁의 객관적 조건, 대중의 가장 전투적인 부분의 의식 발전 수준과 방향, 현 지도부의 정치적 성격, 혁명 전위의 자체 역량 등에 달려 있다. 당의 목표는 전투적인 평조합원들을 당의 강령 쪽으로 획득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필시 당은 좀 더 제한된 수준의 당면행동 요구안을 받아들이거나 심지어는 스스로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때 당은 자기 한계의 이러한 기초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공동전선 파트너에 대해서도 비판할 자유를 견지해야 한다. 당의 노동조합 방침은 공동전선의 행동과 구분되어야 하며, 결코 같은 것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 공동전선과 당의 노동조합 프락션(파견망)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당의 노동조합 프락션은 당원과, 당의 노동조합 강령 전체를 받아들이고 당의 규율에 따라 행동하는 자로 구성된다.

2.5 단결에 대한 촉구가 가장 강하게 제기되는 노동조합에서 혁명가들은 이것을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단결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에 서야 한다. 그러나 혁명가들은 고용주에 맞서는 투쟁 속에서의 단결을 강조하며, 부르주아지와 함께 하는 단결이 아니라 부르주아지에 맞서는 투쟁의 단결을 주장한다. 노동조합 관료와 개량주의 지도부들은 행동하지 않는 단결, 굴복하는 단

결, 고용주 및 부르주아지와 함께 하는 단결을 강조한다. 투쟁하는 단결로 가는 도상에서 계급의 전위는 선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혁명가들은 또한 노동자 공동투쟁이 승리하려면, 조합관료가 투쟁을 배신할 때 이들 관료와 ‘분리’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지적해야 한다. 배신적인 지도부와는 불가피한 분리는 심지어 노동조합 자체의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혁명가들은 노동조합의 분열을 좋아하지 않으며, 소규모의 무기력한 ‘적색 노조’를 만들어 거기서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분열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반대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동조합이 파멸적인 배신을 때리고 테러와 축출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 평조합원의 상당 부분이 이에 대해 항의하고 나서지 못하더라도, 이 경우 ‘공동전선을 깨고’ 새로운 노동조합 결성에 나서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2.6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분명한 조건이 있다. ① 기존 노동조합의 상당 부분 조합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따르겠다는 의지가 대중투쟁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 ② 분열과 단결 파괴의 책임이 개량주의 관료 및 이들의 배신, 그리고 전투적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탄압에 있다는 것을 계급 전체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③ 새로운 노동조합이 모든 노동자 투쟁에서 다른 노동조합들과의 공동전선을 결성하겠다는 열의를 보여야 한다. ④ 혁명가들이 주도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자 내부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이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에 기초하여 노동조합들을 재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⑤ 새로운 노동조합이 협소한 직종적인 또는 순전히 경제적인 관심사를 뛰어넘어 계급투쟁의 더

폭넓은 정치적 측면들을 받아 안고서, 초과착취 당하며 각종 차별로(비정규직 차별로든 여성 차별로든 인종 차별로든) 억압당하는 미조직 계층을 조직하겠다는 방침을 내야 한다.

2.7 요약하자면, 노동조합에서 혁명가들의 공동전선 방침은 노동조합을 질적으로 재편시키기 위한 투쟁이어야 한다. 즉 자본주의의 안전판 구실을 하고, 자본가와 자본가 국가를 대리하여 통제하는 관료가 지배하며, 조합원 가입 자격도 노동귀족으로 제한되는 그러한 노동조합에서 계급의식적인 다수 프롤레타리아트를 포괄하는 조직으로 변모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은 고립적이고 부문적이며 경제적인 계급의식(맹아적 또는 잠재적 형태의 계급의식)을 정치적이며 실로 혁명적인 계급의식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위 투사들을 조직하는 혁명정당의 개입이 필요하다. 즉 혁명정당이 노동조합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동전선을 활용하여 노동조합을 사회주의적 의식의 학교로, 혁명적 계급 투쟁의 도구로 변모시키기 위해 개입하고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2.8 총파업 시에 혁명가들은 대중이 자신의 투쟁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서 관료들의 배신을 넘어설 수 있는 평조합원 파업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해야 한다. 혁명가들은 격렬한 계급투쟁 시기에 더 민주적이고 더 전투적이며 더 광범위한 대중조직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 노동자평의회는 여기서 나온다. 여기에서 혁명가들은 대중총회에 의한 대표자 선출 및 소환제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노동자평의회외의 외연 확대와 중앙집중화를 위해, 그리고 나아가 노동자평의회외의 무장과 병사들의 전취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2.9 초좌익 등 노조 기권주의자들은 노동자 공동전선을 노동조합으로 국한시켜 왔다. 그러나 노동자 공동전선은, 노동자당을 자처하며 실제로 프롤레타리아트의 상당 부분을 조직하고 있는 정당들한테도 마찬가지로 효력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다. 특히 계급투쟁 고조기에는 그 효력이 노동조합 차원에서보다 훨씬 더 크다. 노동자 공동전선의 목적은 개량주의 지도부들을 노동조합 사무실이나 의사당, 연회장, 또는 계급의 적과의 은밀한 회합 등에서 끌어내 가두로, 파업대오로, 나아가 혁명적 상황이라면 바리케이드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개량주의 지도부들이 자본가계급의 하수인임이 입증될 것이라는 사실이, 또는 이들이 평조합원 위에 군림하여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이, 심지어는 이들이 혁명 전위의 가장 뛰어난 대표자들을 살해했다는(예를 들어 독일사민당 지도부가 로자와 리프크네히트를 살해한 경우처럼) 사실이 결코 이들 지도부에게 공동전선을 제안하는 것에 대한 반대 논거가 될 수 없다. 결정적인 것은 이 배신자들이 프롤레타리아트 대중의 신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에 대한 통제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꾸로 말해 이것은 혁명정당이 아직까지 이들 대중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이들 사이에 조직된 지도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2.10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단결은 이와 같이 ‘지도부(지도력) 없이’ 또는 ‘아래로부터만’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식의 시도는 공동전선을 통해 대처하고자 한 바로 그 문제를 건너뛰는 것이다. 그러나 건너뛰겠다고 해서 개량주의 지도부의 영향 하에 있는 노동자들을 그 지도부로부터 떼어낼 수 없다. 개량주의 지도부에게 실천 행동을 제안해야 한다. 공동전선 전술은 여러 단계를 거친다. 그 첫 단계가 공동전선을 제안, 촉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량주의 지도부들에게 그들의 습관적인 계급협조를 포기하고 계급의 적과 싸울 것을 계급적 과제로 제기하며 도전장을 던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 제안은 거부될 것이다. 이 경우 공동전선은 개량주의 지도부들이 투쟁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선동적으로 폭로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 투쟁이 고양되고 혁명정당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는 개량주의 지도부들이 공동전선 결성을 놓고 협상할 수밖에 없다고 느낄 것이다. 개량주의자들과의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은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합의한 행동의 범위, 개량주의자들의 주저와 비협합 때문에 생기는 행동의 한계, 그리고 그 지도부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성 등을 대중에게 정확히 말해 줘야 한다. 혁명정당은 자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전술과 조직과 민주적 책임을 위한 실천 방안들을 제의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능한 한 개량주의자들의 배신을 미연에 방지하고, 배신이 일어나더라도 투쟁에 미치는 교란 효과를 최소화하고, 배신한 지도자들에게 최대한의 불명예를 안김으로써 그들의 지지자들을 혁명적 지도력 쪽으로 대거 결집시킬 수 있다.

2.11 노동자 공동전선은 자본가계급의 정당이나 그 대표자들과 맺는 모든 블록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전선

이다.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타 계급 출신의 동조적인 개인이나 조직된 세력이 지지할 경우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종적 또는 민족적으로 억압받는 집단들의 완전하고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며 국가 탄압이나 파시스트의 공격에 맞서 투쟁할 때 이들 피억압 집단들 내부의 부르주아 세력(예를 들어 유럽에서 흑인 부르주아지나 이슬람 부르주아지)이 투쟁에 협력하겠다면 그들 부르주아 세력과도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공동 행동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반파시즘 노동자 공동전선에 흑인 부르주아지나 이슬람 부르주아지를 위해 특별히 무슨 ‘예약석’ 같은 것을 따로 놓아두어야 할 필요는 없다. 더욱이 노동자계급은 소부르주아지나 무소속(‘독고다이’) 부르주아 명망가들로부터 불확실한 동맹을 얻어내기 위해 자신의 독자적인 요구 — 당면한 요구든 역사적인 요구든 — 를 뒤로 돌리거나 낮춰서는 안 된다. 식민지 또는 신식민지가 아닌 나라들에서 자본가계급 정당은 어떤 체계적인 진보적 행동도 할 수가 없다. 혁명가들은 이들 자본가 정당이 노동자 조직의 공동전선에 참가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혁명가들은 개량주의 노동자 정당이 자본가계급의 정당과 함께 하는 정부, 즉 인민전선/민주대연합 정부에 대한 어떠한 지지도 거부한다. 만약 대중적 노동자 조직과 자본가 정당 사이에 인민전선 또는 조직된 사이비 공동전선이 구성된다면, 혁명가들은 자본가 정당을 축출하기 위한 전술을 펴야 한다. 자본가 정당은 대중 투쟁을 방해하거나 배신하며, 개량주의 지도부들은 자본가 정당의 지지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구실을 끊임없이 내세워 사활적인 투쟁을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에게 입증해 보임으로써 말이다.

2.12 노동자 공동전선 전술은 개량주의 정당에게 자본가계급과 단절하고 노동자정부 수립을 위한 투쟁에 나서라고 요구를 거는 데까지 확장될 수 있는 전술이다. 이 요구는 첨예한 정치적 위기 순간에 주요 당면 슬로건이 될 수 있다. 무엇이 진정한 노동자 정부인가? 부르주아지를 무장해제하고 노동자들을 무장시키며, 은행과 대규모 독점자본 같은 자본가 권력의 핵심 고지들을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장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정부가 바로 진정한 노동자정부다. 명백히 이러한 조치는 선거나 의회정치 지형위에서 실행 가능하지 않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개량주의 영향 하의 노동자들에게 혁명가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선거로 당신들의 당이 집권하면 당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라. 만약 당신들의 당 지도부가 사적소유를 위협하는 진지한 조치를 취할 경우 자본가계급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올 내전 선포에 대비하여 당신들의 노동조합과 당신들의 당을 전시체제로 돌입시켜야 한다. 우리는 당신들 당의 선거 승리를 비판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자본가계급의 공격에 맞서 당신들의 당을 방어할 것이다.”

의회 승리와 독립적인 대중동원이 결합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중도주의 영향 하의 노동자들에게 혁명가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대중투쟁을 선거 일정과 의식 확보에 종속시킴으로써, 헌법의 외피 하에 무장한 사람들의 특별기구인 국가의 진짜 핵심을 공격하지 못하고 만다면 이는 자살행위다. 부르주아 장교단과 최고사령부의 수중으로부터 병사와 무기를 전취하지 않는 ‘노동자정부’는 진정한 노동자정부가 아니다. 노동자민병대를 무장시키고 경찰력을 무장

해제하여 해산시키지 않는 ‘노동자정부’는 진정한 노동자정부가 아니다. 이런 정부를 진정한 노동자정부로 대체하지 않는다면 반혁명 쿠데타에 의해 전복 당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3. 공동전선과 선전그룹

3.1 선전그룹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소규모 조직들 간의 블록을 정말로 ‘노동자 공동전선’으로 볼 수 있는가? 그렇다. 다만 그 블록이 행동을 위해 더 폭넓은 세력의 결집을 지향하고, 대중적 노동자 조직들을 주어진 투쟁 목표 쪽으로 전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한에서만 그렇다. 물론 그러한 블록이 이후 전취될 대중조직의 골간 단위나 좌익적 · 전투적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러한 블록은 자신이 공동전선의 작은 맹아일 뿐이라는 것을 언제나 의식하고 있어야 하며, 대중조직의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제기되는 계급 행동의 단결에 대한 요구와 대립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공동전선의 소형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데 따르는 종파주의적 유혹과 기회주의적 유혹이 있다. 기회주의적 유혹의 귀결은 혁명적 그룹의 독자적인 목소리와 행동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종파주의적 유혹의 위험은 이런 취약한 ‘공동전선’을 대중적인 개량주의 또는 중도주의 조직 내에서의 현실 투쟁과 대립시키는 데 있다.

3.2 선전그룹들 간의 ‘혁명적’ 공동전선이라는 유치한 발상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것이 조직들 간의 영구적 동맹 형태든 공동신문 형태든 또는 선거블록 형태

든 말이다. 특히 선거블록의 경우 혁명적 조직의 독립적인 노선을 숨기고 경시하거나, 중도주의 파트너에게 혁명적 신임장을 교부하거나, 완전한 혁명적 강령 대신 공동의 프로그램이나 요구안을 채택한다면 그러한 선거블록은 혁명적 조직을 기회주의로 전락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선전그룹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지도력을 위한 투쟁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매우 미약한 소수파로서 조직 활동을 대부분 대중투쟁 참여와 결합된 선전임무에 바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빠지기 쉬운 커다란 유혹은 중도주의 조직이나 개량주의자 개인들, 또는 무당파 인자들과 장기 지속적인 또는 반(半)영구적인 블록이나 프론트 또는 캠페인을 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혹은 노동자 대중으로부터 상대적 고립의 산물이자, 이에 절망한 나머지 기회주의적 양보를 통해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는 바람에서 비롯한다. 이런 유혹이 생기면 혁명적 강령이라는 ‘짐’을 내버리게 되고 그것을 선진부위에게 참을성 있게 설명할 필요도 포기해 버린다.

3.3 소규모 그룹한테는 자신의 대중 선전·선동과 자신의 선거 캠페인에 대한 대체수단을 찾는 것이 더 쉬어 보인다. 또 파업이나 시위 등에 독립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 그에 대한 대체수단을 찾는 것이 더 쉬어 보인다. 이는 부지불식간에 혁명적 그룹의 정치활동에서 많은 부분이, 특히 당면한 부분적인 요구의 영역에서는 중도주의자, 전투적 조합주의자 등과 공동으로 수행될 수 있고, 심지어 그렇게 수행되어야만 한다는 견해로 발전한다. 따라서 부지불식간에 ‘나머지’ 강령은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간주되기에 이르고, 강령에 대한 어

떠한 강조도 수동적 선전주의, 심지어 종파주의로 간주된다. 이런 입장으로 빠져들으로써 지금 여기서 대중에게 명확한 독자적인 혁명적 관점이 전달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도리어 중도주의 그룹과의 선전 블록에 의지하며 이를 공동전선이라고 가장함으로써, 최소 공통분모가 승리하게 된다. 선전 블록의 가장 우익적인 조직이 거부권을 가지거나, 아니면 아주 당연한 것처럼 혁명적 입장과 중도주의/개량주의 입장 사이의 ‘타협’이 블록 유지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로 받아들여진다. 혁명가가 중도주의 선전을 훨씬 더 많이 유포하면서 자신의 선전은 작은 비중으로 거기에 덧붙이는 수준으로 유포한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3.4 이러한 유혹이 커지고 유혹에 진 대가도 커지는 영역으로 노동조합이나 선거만한 것이 없다. 여전히 선전 단계에 있는 혁명적 그룹이 거대한 과제 앞에서 자신의 소규모 조직역량과 무력함을 가장 잔인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이 영역들이다. 노동조합에서는 공동의 적, 즉 조합관료의 집권 분파 — 그것이 사민주의자건, 스탈린주의자건, 부르주아 · 소부르주아 민족주의자건 — 에 대항하는 반대파 분자들 그 누구든 그들과 블록을 형성하라는 압력이 자연히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반대파가 보다 전투적인 계급투쟁적 입장을 대표하거나 보다 확대된 노동자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다면, 그들을 비판적으로 지지하고 그들과 연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시적 블록은 블록 파트너의 정치적 · 조직적 오류를 조금도 방어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엄밀하게 공동전선 원칙에 입각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3.5 또한 중도주의/개량주의 동맹세력과의 대동단결론 식 논의는 일절 피해야 한다. 아나코 생디칼리스트(전투적 노조 만능주의자)나 조합주의자는 지도부에 대항하여 평조합원을 단결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 이외에 다른 건 필요 없다는 주장 아래 바로 이런 강령 없는 무정형의 블록을 호소한다. 이 조합주의자들은 실제로는 노동조합 뒤에 자신의 정치조직을 숨긴다. 그러나 평조합원, 즉 조합원 대중이 언제나 그리고 자생적으로 올바른 방침을 알아차리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은 지도부들(그리고 정말이지 조합 임원들)을 필요로 한다. 우리의 목적은 숨김없는 혁명가로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노동조합 지도력을 전취하는 한편 우리의 지도력을 민주적 통제와 소환 등에 따르도록 가져가는 것이다.

반(反)관료 운동으로 평조합원을 조직할 필요와 혁명조직이 노동조합에서 수행해야 하는 전체 과업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전자는 다양한 형태의 합법 공동전선 영역이다. 후자는 당의 노동조합 프락션의 임무이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거나 뒤섞는 것은 혁명적 원칙과 전술의 날을 무디게 하는 중도주의자임을 뜻할 것이다. 사업장 현장위원회 선거나 전국적 조합 선거를 위해 공동 후보나 공동 후보자명부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동 선거공약이 가진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도주의 후보들이 혁명가들에 의해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추천되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점은 노동조합 내 혁명조직의 프락션과 혁명조직의 노동조합 행동강령(또는 현장 행동강령) 지지자를 명확히 구분할 때 확고히 수립될 수 있다.

3.6 혁명적 대표자들에게 제기되는 일반적인 전략적 문제 때문에 혁명적 후보는 지자체나 의회 선거 영역에서 각종 발표 및 출판의 자유를 보유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당면 정세에 초점을 맞춘 완전한 혁명적 입장(행동강령)을 내걸어야 한다. 그렇지만 특정 상황에서 비민주적 법률이나 규정으로 인해 소규모 혁명 그룹이 중도주의 또는 심지어 개량주의 그룹(또는 당)과 결합하지 않으면 후보 출마가 봉쇄될 수도 있다. 가능한 데서는 혁명적 공약의 완전한 분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모종의 공동 공약이 필요한 경우에도 혁명가들은 노동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서 자신들이 만족시킬 수 있는 범위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 즉 ‘공산주의 후보명부’, ‘사회주의 후보명부’, ‘혁명적 후보명부’, ‘적색 후보명부’ 등 수사적 과장을 해서는 안 된다. 혁명가는 선출될 경우, 자신이 행동에 옮길 완전한 혁명적 공약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블록 파트너에 투표할 것을 촉구하는 경우에도 이들 파트너를 충분히 비판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선출한 노동자계급 유권자들에게 책임지는 의무를 분명히 하는 한편, 동시에 중요한 모든 쟁점에 대해 ‘공동전선’의 규율이 아니라 당의 규율을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시 총괄적 원칙을 강조하자면, 제한적인 행동을 위한 한시적 블록을 위해 혁명 조직과 그 공약의 전체 프로필을 가리거나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 **혁명**

[6월 재선거 이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그리스 계급투쟁

홍수천

2012년 2월 48시간 파업에 참여한 그리스 노동자들





그리스 연정을 구성한 세당의 당수들. 왼쪽부터 안도니스 사마라스 신민주당 대표, 왼쪽부터 에방겔로스 베니젤로스 사회당 대표, 안도니스 사마라스 신민주당 대표, 포티스 쿠벨리스 민주좌파당 대표.

6월 17일 그리스 재선거 결과는 중도우파 신민주당이 2.77%라는 근소한 표차로 2위 급진좌파연합 시리자를 누르고 1위를 했다. 앞서 그리스 언론을 비롯한 유럽 각국의 부르주아 언론들과 유럽연합(EU) 각국 정부들이 한 몸이 되어 시리자가 승리하면 유럽연합에서 퇴출되어 그리스 경제는 완전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며 그리스 유권자들을 집요하게 협박해댔었다.

1위 득표 정당에 50석을 보너스로 없어주는 비민주적인 선거제도 덕에 신민주당(29.66%)은 71석을 얻은 급진좌파연합 시리자(26.89%)에 비해 58석이나 더 많은 129석을 확보했다. 사회당의 33석(12.8%)과 민주좌파당¹⁾의 17석(6.3%)을 끌어들이며 의회 다수파를 형성, 친긴축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제 신민주당에게 문제는 의석수가 아니라 새 연정의 긴축 프로그램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저항이다.

이 저항의 잠재적 규모는 시리자의 표가 지난 5월 1차 선거 이후 6주만에 16.8%에서 26.89%로 또 다시 대대

적으로 늘어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리자 앞에는 투표에서 얻은 대대적인 지지를 현장과 거리 의 힘으로 전환시켜야 할 과제가 던져졌다. 민영화와 실업, 임금 · 연금 · 복지 삭감에 반대하겠다는 시리자의 공약을 지지한 165만 명의 투표자들을 투쟁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새 긴축정부가 긴축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할 때 곧바로 이 긴축정부를 끌어내릴 무기한 전면 총파업 조직을 위한 실질적인 캠페인으로 이들 165만 명의 반긴축 지지자들이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공산당(KKE)은 지난 1차 때 8.8%에서 이번엔 4.5%로 표가 반토막이 났다. 25만9천표를 잃었다. 시리자와의 공동전선에 거둬 걸림돌을 놓고 유럽연합-IMF의 긴축 프로그램과 단절하는 정부를 구성하라는 요구를 끝내 거부한 그리스공산당의 종파주의에 대해 노동자 민중들이 환멸, 분노하여 응징한 결과이다. 또한 친긴축 정부가 들어서서 긴축 프로그램을 실시할 권리를 사실상 허용해주는 한편 ‘틈새’ 전략으로 자신들의 생존을 유지하며 수동적으로 “변혁”을 기다리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도 대중들의 분노를 샀다.

새 긴축정부 - 과연 시간을 벌 수 있을까?

6월 선거 이래 그리스의 계급투쟁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유럽 · 미국의 제국주의자들과 그리스 지배

1) 작년에 시리자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져 나간 민주좌파당은 이번 재선거에서 신민주당 주도 연정에 참가하기 위해 기존의 중간지적인 태도를 바꿔 시리자를 집중 비난하는 선거 캠페인을 펼쳤다.

계급은 공갈 협박과 비민주적 선거제도를 수단으로 또 하나의 긴축정부를 앉히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시리자를 중심으로 결집한 반긴축 세력으로 인해 그들의 계산이 하마터면 완전히 뒤흔들릴 뻔했기 때문에 트로이카(유럽연합·IMF·유럽중앙은행)와 유럽의 제국주의 정부들은 당장은 유화적인 몸짓을 보이고 있다. 그리스

민중에게 신체포기각서나 다름없는 긴축 각서(memo-randum; 지난 3월 14일에 체결한 ‘2차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 양해각서’)를 재협상할 수 있다는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신민주당 대표 사마라스와 사회당 대표 베니젤로스는 이에 대해 짐짓 “강경”하고 “단호”한 척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속이 뻔히 보이는, 짜고 치는 고스톱임을 누가 모르랴. 유럽연합(EU)과 바로

그 긴축 각서를 체결한 장본인이 바로 이들 정치인들과 이들 정당이다. 이들이 그 가혹한 긴축 조치들을 실시했고, 보호관세법을 폐지했고 전체 그리스 국민의 반이상을 실업으로 내몰았다. 최저임금과 연금의 대폭 삭감과 대대적인 직장폐쇄를 통해 그리스 노동자들과 청년들에게서 생존권과 함께 미래를 빼앗아 갔다. 자본가와 부자들을 살리기 위해 노동자 민중을 공격한 이 정책에 대해 그들은 답해야 한다.

시리자의 진출이 EU 지도부들을 놀라게 한 덕분에 이제 신민주당과 사회당은 각서의 세부사항을 놓고 흥

정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동시에 그들은 트로이카와의 과거 협력을 숨기고 싶어 한다. 은행과 대기업이 구제 받으려면 노동자 민중들이 위기의 고통을 전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해 준 것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싶어 한다.

또한 그들은 분노와 저항으로 거둬 거리에 나선 수백만 대중(노동자와 청년과 중간 계급 하층 서민들)이 결집하는 것을 막고 투쟁의 동력을 차단하고 싶어 한다. 시위와 광장점거, 24시간/48시간 총파업, 직장폐쇄에 맞선 작업장 점거와 노동자 통제 및 직접경영, 지역별 대중총회들의 확산 등을 통해 노동자 민중들의 저항이 강화되고 고조되어 가는 것에 중지부를 찍고 싶어 한다.

새 긴축정부는 운동을 약화시키고, 노동자 민중들의 저항이 하나로 통합되고 정치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EU의 ‘파트너’들을 설득하여 일부 양보를 얻어내길 바라고 있다. 계급의 취약 부위, 즉 상대적으로 덜 계급의식적이고 덜 전투적인 부분들을 사기저하 시키고, 그리고나서는 한 두 차례의 결정적인 전투를 통해 가장 전투적인 부분을 패배시키는 것이 저들의 계획이다.

한 마디로, 새 긴축정부는 시간을 벌고 싶어 한다. 5월 및 6월 선거에서 EU와 IMF의 지시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투표자 다수 — 주로 시리자에게 대거 투표한 좌파 유권자 — 를 “재협상”과 “성장 정책” 따위의 말로 속여서 조용히 있게 만들고 싶어 한다.

새 긴축정부는 운동을 약화시키고, 노동자 민중들의 저항이 하나로 통합되고 정치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EU의 ‘파트너’들을 설득하여 일부 양보를 얻어내길 바라고 있다. 계급의 취약 부위, 즉 상대적으로 덜 계급의식적이고 덜 전투적인 부분들을 사기저하 시키고, 그리

고나서는 한 두 차례의 결정적인 전투를 통해 가장 전투적인 부문을 패배시키는 것이 저들의 계획이다.

이 위기는 자본주의의 위기다.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새 긴축정부가 이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을 지가 의문시된다. 그리스 경제를 파탄내고 그리스 사회를 마비 상태로 몰아넣은 것은 단순히 정권의 실정과 부패가 아니라, 2008년에 터져 나와 여전히 체제 전체를 휘감고 있는 자본주의 자체의 역사적 위기이다.



유로존 위기를 상징하는 마크

위기의 근본 원인은 그 모든 외견상의 역동성(신기술, 생산의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쇠퇴하는 체제라는 사실에 있다.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생산에 투자해서 거둘 수 있는 이윤율이 -- 그 이윤량은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 점점 더 하락하는 것

을 발견한다. 이것은 이윤 -- 즉 노동자가 생산한 부불(不佛) 잉여가치 -- 이 거액의 신기술 투자비용 대비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의 소유자들은 생산을 포기하고, 보다 높은 이윤율을 채길 수 있는 부동산, 금융, 원자재, 국채에 대한 투기로 전환한다. 생산이 쪼그라들면서 체제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투기열풍이 가실 줄을 모른다. 결국 거품이 뿔 터질 때까지는 말이다.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는 궁극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 밖에 없다. 그나마도 일시적인 해결책이다. “과잉” 자본, 즉 보다 취약한 자본의 파괴 -- 폐업,

즉 기업 및 은행의 도산 -- 와 노동자 대량해고 및 착취 강화 · 공황화이다.

이에 더해 자본가들 간에, 자본가 국가들 간에 시장과 원료와 값싼 노동력을 위한 세계 재분할 투쟁이 격화되어 전쟁으로 치닫는 속에서 또한 과잉 자본의 파괴가 이루어진다. 지금 독일 같은 나라가 위기를 자국 노동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약한 국가

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시에 우리는 지금 어디서나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계산서를 노동자, 청년, 주민대중들에게 떠넘겨 치르도록 하기에 위한 대대적인 공격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본다.

이 모든 것이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은, 자본주의 아래서 생산은 주민의 필요 충족이 아니라 자본가계급의 이윤 증대를 위해 조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자계급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해결책만이 있다. 사회주의혁명!

두 가지 가능성

현 위기는 궁극적으로 오직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대다수 주민대중의 승리에 의해서든가, 아니면 자본주의 반동(즉 제국주의와 그리스 자본가들의 동맹)의 승리에 의해서든가.

사마라스 정부(신민주당 주도의 새 연립정부)는 이번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적’ 국민 위임을 내걸고 후자의 길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사마라스의 ‘민주주의’ 뒤에는 이미 시위자들과 청년들,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겨냥하여 잔인하게 사용된 바 있는 억압 국가기구가 버티고 서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무대 옆에서 대기하다가 운동 진압을 위한 ‘민주적 수단’만으로 충분치 않으면 즉각 투입될 수 있는 것이 이들 경찰, 군대 등 국가기구이다. 여기에 더해 지금 세가 불어나고 있는 파시스트 돌격조들이 이미 이주자들과 홈리스 생활자들, 급진 청년들과 좌파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에 나섰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허비할 시간이 없다. 노동자



자본가 국가는 ‘민주적 수단’만으로 충분치 않으면 운동진압을 위한 경찰, 군대 등의 억압기구를 가지고 있다. 자본가들을 비호하는 폭력집단인 그리스 경찰.

계급이 지금 희망의 계급이다. 좌파는 대중에게 희망의 뜻대이다. 신민주당의 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좌파 투표의 대대적인 증가, 특히 시리자의 거대한 진출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최근의 공격을 역전시키는 반격을 조직하고 해고와 실업의 위협을 견어내고 EU와 IMF의 강요를 거부하는 단호한 행동 없이는 이러한 전투적 분위기도 탕진될 것이다.

명백히 지난 5월 선거와 6월 재선거 사이의 시기는 어느 당이 통치할 것인가 만이 아니라 어느 계급의 이익을 위한 통치일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했다. 비록 사마라스가 승리했지만, 그의 정부에 맞선 방어적 투쟁은 불가피하게 다시 한 번 권력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현재 시리자 대표 치프라스가 사마라스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 정부 정책에 대해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은 치프라스와 시리자 다수분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비쳐주는 불길한 조짐이다. 새로운 선거와 신민주당의 ‘실패’를 기다린다면 이는 재앙이 될 것이



시리자는 스스로를 계급투쟁 정당으로, 직접행동 정당으로 재편해야 한다.

다. 지금 거대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시리자는 스스로를 계급투쟁 정당으로, 직접행동 정당으로 재편할 수 있고 재편해야만 한다. 만약 좌파가 전투적인 공동행동을 밀어가는 데서 비종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동시에 개량주의로 퇴보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러한 재편이 가능해질 수 있다.

당 강령의 핵심에 노동자정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새겨 넣어야 한다. 즉 정치총파업 속에서 형성되는 사업장별 지역별 파업위원회들과 정방대 등 투쟁기관들에 바탕을 두고 대중봉기에 의해 권력에 오르는 그러한 노동자정부만이 진정으로 대중의 처지를 개선시키고 참호로 둘러싸인 자본가계급의 권력을 결정적으로 깨뜨리는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혁명정당

수년간 그리스는 혁명적 사태전개를 거쳐 오면서 거듭 반복해서 준혁명적 상황들을 맞았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첨예한 혁명적 상황으로 귀결되지 못한, 그리하여 그 어떤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도 결과하지 못한 이유는 다름 아닌 그리스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 — 진정한 혁명정당의 결여 — 에 있다.

그러한 정치세력의 창출이 모든 계급의식적인 노동자들, 청년들 그리고 급진적인 반자본주의 좌파 활동가들 앞에 놓인 핵심 과제이다. 최근 몇 년간 그들은 제국주의와 긴축 정부의 공격에 맞서 거듭 싸워 왔다. 그러나 거기서 실종되어 있는 것은 조직된 혁명적 노동자당이다. 권력 장악에 이르는 도상의 핵심 지점들을 표시해 주는 이행요구 프로그램에 바탕을 둔 노동자혁명정당이다.

이러한 당을 만드는 투쟁이 진공 속에서 이루어질 순 없을 것이다. 150만 명 이상이 이번 선거에서 시리자에 투표했다. 수만 명은 아니더라도 수천 명이 시리자의 대열을 늘릴 것이다. 한편 그리스공산당은 그 기회주의와 종파주의가 뒤섞인 모습으로 인해 신임을 완전히 잃었다. 급진적이고 공공연한 반자본주의 좌파는 최근 몇 년간 투쟁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그들은 대중을 이해하지 못하고 끌어당기지 못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혁명가들은 이제 그리스 노동자계급의 대다수가 오늘 희망을 걸고 있는 곳에, 즉 시리자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시리자를 민주집중제에 기반한 계급의식적인 정



혁명가들은 혁명적 조직, 반자본주의 조직, 사회주의 조직, 아나키즘 조직들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개량주의 조직들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노동자 조직들의 공동전선 창설을 위한 가장 일관된 투사여야 한다. 그러한 공동전선이 결코 정치적 차이를 묻어버리는 것을 뜻하지 않지만, 정부와 자본가들에 맞선 투쟁에서 행동 통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분명하다.

당으로 되게 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시리자를 개량주의의 영향으로부터 벗겨낼 조직된 캠페인에 착수하여 시리자가 혁명적 강령과 조직구조를 채택하도록 투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투쟁은 노동조합에서 관료층에 맞선 투쟁과 분리될 수 없다. 노동총연맹(GSSE)과 공공노동연맹(AD-EDY)의 상층부는 사회당을 매개로 끊임없이 “정부와의 협력”을 모색한다. 노동조합들을 횡적으로 관통하는 평조합원 반대파 운동을 구축해서 노동조합을 부문적인 경제적 방어 기관에서 전 계급적인 투쟁 기관으로 재편하는 투쟁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공동전선 결성을 위한 투쟁

기존 정당들과 조직들에 대한 비판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리 옳고 필요한 비판이라 하더라도 결코 그리스 노동자계급 대중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최선진 부위를 설득하는 데도 충분치 못할 것이다. 그들은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피착취 피억압자들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이

끌 당을 원한다.

따라서 혁명가들은 혁명적 조직, 반자본주의 조직, 사회주의 조직, 아나키즘 조직들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개량주의 조직들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노동자 조직들의 공동전선 창설을 위한 가장 일관된 투사여야 한다. 그러한 공동전선이 결코 정치적 차이를 묻어버리는 것을 뜻하지 않지만, 정부와 자본가들에 맞선 투쟁에서 행동 통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공동전선을 통해서만이 운동의 현재 약점과 현 지도부들의 방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동전선을 모든 수준에서 제안해야 한다. 일부 도시와 지역에서는 특정 투쟁을 위한 공동행동이 조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폐쇄에 맞선 투쟁과 점거한 농장을 방어하는 투쟁에서는 즉각 공동전선이 가동되어야 한다. 공동행동이 파시스트의 공격에 맞선 정방대 조직들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노동자 조직들에게 그들 회원 및 지지자들이 그러한 공동전선에 적극 참가하도록 조직할 것을 요구해

야 한다. 이러한 요청과 촉구가 이들 조직의 지도부만이 아니라 평회원들에게도 다가가도록 해야 한다. 공동전선이 단지 당 또는 노동조합 등 조직 지도부들 간의 협정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공동전선의 목표와 투쟁방법은 운동 전체에 걸쳐 두루 공개적으로 널리 토론되고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도자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해 질 것이고, 또한 누구나 -- 기존의 미조직 노동자들과 실업노동자들, 그리고 아직 조합원이나 좌익정당 당원이 아닌 자들을 포함하여 -- 능동적으로 가담하는 것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공동전선이 중심이 되어 모든 작업장에서, 모든 지구에서, 모든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공동체에서 정기적인 대중집회를 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노조들 간의 분할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사이의 분립도 행동 속에서 극복될 수 있고, 지역 수준에서 실업노동자와 청년, 여성, 이주자뿐만 아니라 소상인과 농민, 하층중간계급들도 인입될 수 있다.

사업장 현장과 지구의 총회에서 실행위원회를 선출해서 대중들에게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고, 실행위원회 위원들을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즉각 소환,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그러한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질, 즉 과단성과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원회들이 처음에는 실제적이고 지역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지역 수준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대부분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요구들과 제안들, 해결책들에 대해 그 초점을 정확히 잡아서 지역, 광역, 전국 수준에서 각각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총회와 대표자평의회가 투쟁의 중심이 되어 기존 국가기구와 대자본에 맞서는 대항력을 형성할 수 있고, 형성해야 한다. 이미 등장하고 있는 자주적 조직의 요소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평의회로, 이중권력 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

대표자평의회들의 전국적 네트워크

단지 모든 구역들에서 그러한 기구가 창설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가능한 한 빠르게 전국 대표자회의를 소집해서 한 데 모여야 한다. 그래서 이 전국 대표자회의가 전체 운동을 대변하고 운동의 전투 전략을 결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대표자회의가 그리스 혁명이 직면한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들을 놓고 의견 일치를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의 계속되는 공격과 트로이카의 긴축 강요에 맞선 무기한 전면 정치총파업의 선언과 조직.

둘째, 대중의 고통과 궁핍화를 종식시키고, 그리스 국민의 경제·정치 생활을 옥죄고 억누르는 자본가들의 통제권과 장악력을 해체해 들어가는 조치들을 중심으로 노동자계급을 결집시키기 위한 비상 프로그램(즉각적인 행동 강령)의 확정.

셋째, 노동자 민중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현 긴축정부를 타도하고, 평의회들과 투쟁하는 노동자 조직들 및 노동자정방대·민병대들에 기반하여 비상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노동자정부의 수립.

* * *

그리스 혁명은 유럽과 나아가 전 세계의 계급투쟁을 확대 심화시킬 열쇠이자 동시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되었다. 그리스 노동자계급과 청년층, 이주자 그리고 주민대중과의 연대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계

급투쟁을 전진시키기 위해 분투하는 모든 세력들과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당면 임무다.

국제주의자로서 우리는 그리스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또한 우리의 투쟁이라고 본다. 그리스 민중의 궁핍과 참화를 불러온 자본주의의 위기는 일국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고, 오직 국제적 저항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우리에게 이것은 유럽혁명과 나아가 세계혁명을 통해 자본의 독재와 제국주의를 타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의 상황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계급투쟁의 앞에 놓인 길을 여는 열쇠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 상황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판단을 제시하여 그리스 노동자들과 청년들, 좌익조직 성원들과 토론하고, 그리하여 어떻게 전 세계적인 연대와 저항을 만들어나갈지에 대한 공동의 인식에 도달하고자 한다. **혁명**





혁명

지난 창간호(6월) 목차

창간호를 내며

통합진보당 사태와 새로운 노동자당 - 양효식

현 시기 남한에서 노동자당 전술을 위하여 - 양효식

야권연대와 단절하는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본격화하자! - 고민택

통진당 사태를 계기로 등장한 쟁점에 대하여 - 고민택

2012년 현대자동차 투쟁을 뇌관으로 총파업을 조직하자! - 최병승

[JW지회] 단결로, 연대로 직장폐쇄 철회투쟁 승리

비정규직 조직화와 더욱더 과감한 투쟁이 승리의 관건! - 구재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제2막을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로 열어 나가자! - 임천용

프랑스와 그리스 선거 이후 유럽 정치정세 - 이민수

[그리스] 선거와 혁명전략 - 홍수천

[자료] 노동자정부 전술에 대하여

[기고] 오월동주, 1사1조직 통합과 이동우 죽이기 - 아방가르드

창간호 발행에 즈음하여

- 〈혁명〉과 함께 혁명정당 건설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나가자!

- 〈혁명〉, 이렇게 실천하자!!

- 정세월간지 ‘혁명’ 창간을 축하합니다.

동지들! 함께 투쟁합시다!

가칭)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과 함께 하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정치활동을 통해 반드시 노동자혁명당을 건설할 의지가 있는 동지들은 아래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개량주의 정치세력들에 대한 소극적인 반대를 넘어
자본주의 세상을 끝장내기 위하여
혁명의 깃대를 굳게 움켜 쥐고, 붉은기 높이 들시다!
노동자계급의 권력을 쟁취하여, 착취와 억압 없는 세상으로 전진합시다!
동지들! 더 이상 머뭇거림을 멈추고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을 향해 힘차게 함께 합시다!

[후원 및 정기구독 계좌]

농협중앙회 040-12-245042 (양효식)

(반드시 저희에게 연락을 먼저 취하신 후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신청 및 독자기고]

E-mail : wrp@jinbo.net

전화번호 : 02) 6348-8318

(신청하시면 답메일을 드리거나 전화통화하여 구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명

“자본가 정당과 손잡는 야권연대에 반대하고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열망하는 노동자들은 새로운 노동자 정당이 또 다른 의회·개량주의 정당 건설로 귀결되지 않도록 전면적인 정치투쟁에 나서야 한다. 혁명정당 대신 초기 민노당을 복원하는 수준으로, 또는 좌파 사민주의 정당 정도로 귀결된다면 민노당 파산의 궤적을 — 이번에는 압축적으로 급속히 — 되풀이 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야권연대 구도로 다시 빨려들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이 혁명정당 창당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다.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은 그냥 당위가 아니라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 새로운 노동자당 건설이 성공하기 위한 유일한 담보 조건이다.”

— ‘〈혁명〉 창간호를 내며’ 중에서 —